


정세대응을 위한 여성 task force - 3차 전문가포럼




"이라크 파병, 여성, 평화행동"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여성부
- 일시 : 2003년 10월 30일(목) 오후 3시-오후6시
- 장소 : 성공회대성당 성가수녀원



"이라크 파병, 여성, 평화행동"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여성부
- 일시 : 2003년 10월 30일(목) 오후 3시-오후6시
- 장소 : 성공회대성당 성가수녀원



사회 : 홍승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세대응팀장)

발제 1. 한반도평화, 이라크파병으로 풀 수 있나 :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2.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이라크파병과 평화 : 김연리(평화여성회 정책위원)

발제 3. 이라크파병과 시민사회 역할 :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

토론 1. 이라크 파병과 국회의 역할 : 김영환(국회의원)

토론 2.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 :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 3. 이라크인은 무엇을 원하나 : 강인화(이라크반전평화팀)

전체토론

이라크 파병: 전망과 대책

김연철(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파병 결정의 변수

o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함

- 한미 관계
- 이라크 및 중동국가와의 관계
- 국내 여론

< 파병과 한미 관계 >

o 이라크 문제에 대해 이미 한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

-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 유연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 및 재정적 부담의 최소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서회·제마 부대를 파병했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분담을 했으며, 추가 파병을 결정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차관이나, 채무 연계(사우디아라비아) 형태로 지원하는 데 비해 한국은 2억 6천만달러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약속(지원규모면에서 7위)했고, 파병시 비용을 합치면 실제 부담규모면에서 영국, 일본 등을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큰 국가가 되었음

· 국방부는 '97~03'년간 병영시설 현대화 실적으로 투자된 비용은 2648억원

o 파병과 한미 동맹과의 관계

- 미국의 분열: 미국내 이라크 전쟁방식에 대한 회의감 증대, 네오콘의 영향력 쇠퇴, 대통령 선거의 압박 등으로 미국의 분열이 심화
- 한미 동맹은 네오콘과의 동맹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국과의 포괄적 관계를 의미
- 북핵 문제와의 관계: 사안의 성격이 다른 문제이고, 미국내에서 북핵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
-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의 파병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이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전략적 변화를 반영
- 장기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
- 파병의 형태 및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이 선택할 문제

<이라크 및 중동국가와의 관계>

- 시간이 지날수록 이라크의 상황이 악화
- 테러의 조직화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면서, 치안불안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바그다드에서 북부지역으로 테러지역이 확대)
- 최근에는 다국적군에 대한 테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모술에서의 알바니아군 사망, 스페인 대사관 테러, 폴란드군의 오발사건에 따른 주민 감정 악화
 - 빈 라덴의 다국적군에 대한 경고, 이라크내 외국인에 대한 반감 확산, 무차별적 테러(유엔, 국제적십자사 등) 확산
- 아무도 2차 파병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파병이 예상되는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테러가 집중될 가능성이 현실화
 - 서회·제마 부대의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파병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 됨
- 한국의 대중동 수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아랍에

미리트의 증계 무역 포함) 등에서는 반미 감정이 확대

- 이라크에서의 한국군의 군사적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서회·제마 부대가 쌓아 놓은 좋은 이미지를 잃게 됨
- 이라크 재건 사업의 참여는 미국 기업이 독식하고 있고(최근 한국의 이라크 통신사업 참여 좌절), 이라크의 새롭게 구성될 정부의 성적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이라크 정세에서 자유투표가 실시된다면, 65%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친미국가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중동국가에서의 무차별적 테러 확산으로 중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교민과 기업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움(일본은 중동지역에서의 테러경계령을 고려중)

o 전투병 파병의 국제적 이미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의 이미지 실추

<국내 여론>

o 평화번영정책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 전투병 파병은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
- o 주요 외교정책 결정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대부분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음
- 터키, 파키스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조차도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파병 시기를 검토하고 있음

2. 파병의 형태와 규모

전투병과 비전투병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

- 지난 3월 1차 파병동의안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국방부에서조차도 전투병과 비전투병이라는 개념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음
- 조영길 국방장관: “공병부대, 의료부대, 일부 경계부대 등을 요청했는데, 경계하는 부대는 준전투부대와 다름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음”/(전투부대 파병;질문자)은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음“(2003. 3.21, 236회 국회 국방위 회의록)
- 1차 파병의 명분이 ‘비전투병 파병’이었음
-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구분 기준
 - 병과구성: 의료, 공병부대 중심인가? 경계부대 중심인가?
 - 역할: 재건·복구인가? 치안 및 경계인가?
 - 지역의 안정성: 전투 및 전투에 준하는 치안불안상황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 전투병 파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국내적 지지를 받기 어려움
 - 여론은 추가 파병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70% 정도가 비전투병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라크 상황 악화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비전투병 파병 여론의 증가 이유: 파병 토론에서의 압도적 논리차이, 현지상황에 대한 보도의 증가, 최근 이라크 상황의 악화
- 국제사회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할 위험이 너무 큼
 - 터키의 철회, 파키스탄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거부, 중동국가의 불참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1000명 수준의 평화유지군)을 제외하면 최대 파병 국가
 - 이라크내 게릴라 세력 및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다국적 군에 대한

테러를 선언한 상태에서 한국은 우선적인 테러대상국가로 노출

o 모술 지역의 101 공중강습 사단 대체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① 101 사단은 2만여명의 미군 병력과 군단급 화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체하기 어려움
 - 미국은 모술이 안정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다국적군으로의 대체를 모색했으나, 현재 상황은 미국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전개
- ② 통상적인 평화유지군이 인구 1000 당 20여명이나, 모술지역은 230만명의 인구(4만6천명 필요)와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음(다른 국가들의 추가 파병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움)
- ③ 대규모 전투병 유지에 필요한 병참과 수송체계가 거리와 장비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o 전투병 파병의 긍정적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반면, 현실적으로 전투병 파병으로 직면할 위험은 현저함

□ 이라크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태가 되어야 함

o 치안 및 경계 부대는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

- 전장이 따로 없는 테러전: 폭탄테러나 저격테러가 빈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지 순찰이나, 검문과정에서 공격을 받거나 오인 사격 가능성이 큼
- 시위의 격화: 60%에 이르는 실업률에 따라 과격시위가 급증, 이라크는 주민무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위가 총격전으로 발전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

o 의료와 공병 부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한국군은 의료부대와 공병 부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 과병규모가 결정됨

- 1차 과병당시 의료병 부족으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의료부대의 차출

3. 과병 결정의 신뢰 회복

□ 과병과 관련한 정책 결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 조사단의 부실 논란,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과병 결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를 상실

○ 정부내에서 과병정책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함

- 2차 과병 논의(형태, 규모, 시기)는 이라크 정세와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안보 관련부처와 정부 부처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 조사단 활동을 충실하게 진행하여야 함

○ 모술 지역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

- 특히 쿠르드 민족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측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함

- 쿠르드 민족분규에 개입될 경우, 이라크 국가형성 이후에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음(1차 조사단 보고서에서 박건영 교수의 강조점을 참조해야 됨)

○ 서희, 제마 부대 등이 활동하는 나시리아나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중남부 및 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

- 조사단은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충분히 활동을 해야 됨
- 일본은 정부 조사단 2차례를 포함 15차례의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음
- 국회 조사단, 중동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조사단 구성등 다양한 형태의 결정 근거를 갖어야 함
- 이라크 상황이 점점 더 안개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측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가능하다면, 시민단체의 현지조사내용도 결정과정에 참고

4. 한국형 이라크 재건 복구 모델의 필요성

- 이라크 주민 및 중동국가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공병업무 중심의 부대 구성
- 따라서 안정이 확보된 지역이 검토 대상
- 북부 지역이라면,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실제 파병이 이루어져야 함
- 재건 및 복구에 적합한 상황 리스트를 작성해야 됨

- 의료 및 공병부대의 현실적 운영을 고려한 비전투병 파병 규모를 결정하고, 실제 파병은 이라크 상황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우선적으로 재건 복구 활동에 적합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발대를 파견하고
- 점차적으로 안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 미국의 이라크 대책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됨

- 재건과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치안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

- 국제사회와 미국내에서 이라크 안정화 전략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 미국내 강경파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략에 대한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참조자료 :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파병반대자료집'에 수록됨>

파병 거부가 국익이다

옛날에는 개인들이 용병으로 활동했으나
요즘에는 국가들이 그런 일을 한다.....
미군 병사의 부모들은 이제야 교훈을 깨우쳤다.
나는 한국의 부모들이 좀더 현명해지기를 바란다.
_ 사타르 카셈

국내 여론을 활용하기는커녕,
협상 상대자를 대신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협상력은 없다. 그렇게 되면, 상대 국가는 우리를
외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_ 김연철

파병거부가 국익이다.

김연철(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외교정책은 국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부시행정부 스스로 후세인정권과 9.11테러가 관계없음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의 명분은 없다. 전투병 파병은 국익에 부합되는가? 국익은 경제적 실익, 한반도 안보 현실, 한미 관계의 영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투병 파병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병의 경제적 실익 없다.

먼저 경제적 실익 부문이다. 첫째,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터키와 파키스탄과 달리 미국은 별도의 경제적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조용길 장관은 이라크에 1개 여단 3000여 명을 파병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전후복구 사업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이라크의 원유 수출로 복구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유정파괴와 석유산업의 인프라 낙후로 당초 원유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38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를 안고 있다. 미국은 외채 감축을 원하고 있으나, 이라크의 외채가 대부분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원유채굴 사업 투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격적인 복구사업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복구사업은 미국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중동 인근국가들의 하청참여 형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향후 정권이양 일정이 구체화할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이라크정부가 전후복

구 사업을 결정한다는 점은 파병여부가 전후복구 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새로이 구성되는 이라크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투병보다는 의료와 건설지원 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동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이라크의 테러는 국면별로 중요 타격대상에 집중되는 조직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미국과 국제사회를 분리시키기 위한 상징적 대상에 테러를 집중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이라면, 비극이다.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테러나,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중국, 중남미와 더불어 세 개의 중요시장중 하나인 중동을 잃는 것이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이란과의 경제관계는 여러 가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 유조선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일부 사람들은 폴란드와 한국을 비교하지만, 중동경제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파병 거부해도 한미 관계 이상 없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거론한다.

대부분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선동행위다.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의 파탄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1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고, 현재에도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영국을 제외하고, 미국의 어떤 동맹국이 우리만큼 미국의 입장에 오랫동안 일관되게 동참하고 있는가?

한미 관계는 중요하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동맹국의 의무다. 현재

이라크에서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다. 의료와 건설 등 이라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을 줄이는 것이요, 치안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반미 감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이른바 네오콘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라크 처리 문제와 관련,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으며, 50% 정도는 명시적으로 네오콘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중도와 의원들까지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이른바 네오 콘의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아마도 조만간 네오 콘들과 함께 폐배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네오 콘들과의 차별성을 통해 재선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쟁점을 완화시킬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네오 콘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지만, 부시 대통령이 너무나 확실한 폐배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투병 파병으로 네오콘과 동조하기 보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이라크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을 찾는 것이 성숙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과 핵 문제를 연결하는 논리도 현실 타당성이 없다.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밍다고 강경으로 가고, 굽다고 온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1차 파병을 요청했던 국방성 강경파들의 입장은 3차회담에서 6차회담까지 변함이 없다. 파병 거부로 네오 콘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핵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체제(PSI)와 같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세력이 바로 네오콘 들이다. 한국의 파병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은 전략적으로 선택된다. 미국의 선택포기 방침에 변화가 없으면, 6차회담의 성과는 보장될 수 없다. 파월을 중심으로 미국이 1차 6차회담이후 포괄적 협상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대

동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외교적 쟁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왜 부시 행정부가 지난 3년여 동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무대적으로 일관했는지를 묻고 있다. 네오콘들의 입지 축소는 6자회담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북한 핵문제가 진전이 없다면, 더더욱 전투병을 보낼 수 없다.

동맹국의 역할만큼 우리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한반도는 불안정한 잠재적 위협을 안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외국에 보낼 수가 없다.

한반도 정세,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

과병거부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철수로 이어 질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현재의 남북관계 수준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가 갑자기 불안정해 질 가능성은 없다. 물론 네오콘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2사단 철수 가능성을 흘릴 것이다. 1971년 국군이 베트남에서 돌아오기도 전인 그때에, 6만6천명의 주한 미군 중 2만 2천명이 우리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철수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의미 뿐 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전투병을 과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이 지상군을 줄이고, 신속대응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2사단 재배치 문제 등은 과병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수준이다.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남북한의 신뢰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적 협상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과병 논의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외교가 없는 나라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외교정책도 결정 과정이 있다. 현재 상황은 한미 관계, 북한 핵문제, 그리고 국민 여론 등 과병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런 점에서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관료가 너무 많다. 외교관은 한국의 당면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할 일을 주미 한국 대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국방부는 어떤가?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말 그대로 현지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닌가? 유엔 사무소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우리 조사단은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않고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은 없고, 의견만 있다. 그 정도는 현지에 가보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은 과병관련 법안을 통과하고도 10여 차례의 조사단을 파견하여 평화유지에 적합한 상황인지를 점검하고 있다. 다시 조사단을 파견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 분명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외교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한미 관계에서 앞으로도 많은 중요한 협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관료들이 한미관계를 외교적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인가? 정책결정 과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민적 동의의 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외교는 협상 상대방과의 관계와 국민 여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노련한 외교관이 어려운 협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당신의 제안을 받고 싶지만, 우리 국민을 납득시킬 자신이 없다" 그것이 민주 국가의 외교 협상력이다. 국내 여론을 활용하기는커녕, 협상 상대방을 대신하여 근거도 없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협상력은 없다. 그렇게 되면, 상대 국가는 우리를 외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관료들은 스스로 국익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한국형 평화 봉사 활동이 필요하다.

과병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의 미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은 이라크 주민의 민심을 얻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한국형 복구 프로그램을 갖고 이라크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간접자본 시설 복구, 의료지원, 교육체계 복원, 행정체계 구성 등이다. 민관 합동으로 이라크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평화봉사단 구성은 이라크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국내의 청년 실업 극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평화 봉사 활동은 중동지역에 한국의 평화적 위상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평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 줄 수 있다면,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라크 파병과 평화

김엘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

이 글은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성주의적' 운동의 내용과 전략 자체를 논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전쟁과 이라크 파병 문제를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성평화운동을 하며, 여성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1. 국익을 넘어 반전평화운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때마다 곤혹스럽다. 냉정한 국제질서와 힘의 논리가 지배적인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민족의 국익을 넘어선 반전평화를 외치는 일은 마치 비현실적인 순진성을 드러내는 일 같다. 냉전체제 하에서 형성된 미국과의 혈맹 관계와 경제논리 앞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여야 마치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과연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파병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경계 안에 갇혀서 국익을 따지면서 파병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다. 내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 내가 어떠한 시민이 되느냐하는 문제이다. 남한체제의 군사안보와 이에 따른 기존 규범에 균열을 내는 것이고, 국가의 동원체제에 나를 위치시키지 않으려는, 나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내가 미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국가가 나와 미국을 매개시킨 순응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일원화된 군사화와 질서를 재생산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으로서 미국의 침

략을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정치적 주체가 되어, 민족 경계 넘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또다른 시민의 주체들, 여성들과 만날 때,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나 자국중심적인 이익과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진정한 평화운동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이 진정 평화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국중심적인 운동이 아니라, 타자로 간주된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어떠한 군사적 폭력도 해제하려는 실천에 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와 문화를 나의 삶의 전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탈식민지화하려는 노력들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경계 너머에 있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가능할까? 나의 아들, 나의 애인, 친구를 이라크에 보냈으로써, 이라크 여성들의 안보와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란 무엇일까?

2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 전후 사회건설에서의 여성의 인권

2.1. 아프가니스탄 여성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의 인권은 미국 침략의 명분이 되기도 하고 전쟁반대의 주요한 모티프가 되기도 하였다. 전쟁반대자들은 피난민으로서, 가족부양자로서, 이슬람 종교의 피해자로서, 성폭력 대상자로서 노출되어 있는 아프간 여성들에게 전쟁은 더 끔찍한 인권유린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미국은 야만적인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억압받는 여성들을 구원하여야 한다는, 정권과 국민을 구분하는 인권 외교의 전술을 기반으로 침공의 정당성을 반복하였다. 결국 카불에 미국이 입성하고 탈레반 정권이 퇴각했을 때, 여성들의 부르카를 벗어 던지는 사진들은 억압적 여성의 현실을 금방이라도 바꾸어줄 해방을 상징하였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줄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듯 하였다.

그러나 아프간 여성의 목소리는 주체화되지 못하였다. 아프간여성혁명연합은 지속적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정권의 비민주성과 여성차별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전쟁이후 나아지지 않는 여성인권의 현실을 세계에 고발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인권감시(Human Right Watch)의 2003년 아프가니스탄 보고서에 따르면¹⁾, 여성과 소녀들은 성폭력과 테러의 두려움으로 학교도 못가고, 바깥 출입을 삼가는 등, 거리 이동의 자유권의 제한받고 있다. 군인들이나 경찰에 의한 강간이나 집으로 침입하는 약탈자에 의한 강간이 속출하고, 군인에 대한 성적 학대를 피해서 강에 뛰어들어 익사한 여성들도 있다.²⁾ 납치와 강요된 결혼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갖지 못하고 있다.

아프간 여성들은 각 지역을 장악한 군벌세력의 지도자들이 여성인권에 반하는 많은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이 여성의 인권침해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2002년 6월 구성된 비상의회인 로야 지르가(koya jirga)의 1500명 의원 중 여성이 160석을 보장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여성들의 두려움, 이동의 자유권이 제한 받는 한 여성과 소녀들은 주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여성들의 '주체적 말하기'가 상실되거나 부재한, 전후 사회건설의 노력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2 이라크 여성

구원받아야할 피억압자이고 피해자로서의 여성, 그래서 전쟁의 명분이 되기도 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증거할 타자가 되는 여성들, 그러나 새로운 사회건설에서 정치적 주체자로서 고려되지 못하는 여성의 현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총을 든 미군을 배경으로 거리에 앉아있는 검은 베일 속의 이라크여성, 죽은 아들 앞에서 오열하는 이라크 어머니, 뉴스 사진 속에 그려진

1) *Killing You is a Very Easy Thing For Us? Human Rights Abuses in Southeast Afghanistan*, July 2003, Vol. 15, No. 05 (C)

2) *The Guardian*, Monday April 28, 2003

여성들의 모습은 전쟁의 참상을 더해 주는 앵금 속에서 누군가의 보호와 구원을 받아야할 민족적 피해자로서 그려져 있다.

개인적 주체로서 말을 하고, 행위하는 여성의 모습은 공식적으로 가시화되는가? 가족과 민족 국가 틀 안에서만 여성들은 의미화되고 위치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남성이 자신들의 사회관계에 따라 자신을 정체화하면서 사회적 주체로서 행위 한다면, 여성은 단지 여성으로만 범주화되면서 남성과의 관계에서 규정받는다. 민족적 어머니로서, 남편을 잃은 아내로서, 이라크의 영상들은 이를 잘 제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나의 주목을 끄는 것은 미디어에 비춘 이라크와 현지 모습에 여성들이 없다는 점이다. 후세인 동상이 길에 내동댕이쳐진 그 날의 언론의 동영상에도 여성들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MBC나 KBS의 현지보고 프로그램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는 없다. 반미를 외치고,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는 이라크인들은 거의 다 남성들이었다. 단지, 플라방이 나뭇구는 시장바닥에 앉아 텨가를 파는 듯한 한 여성이 베일에 싸여 있었고, 흠먼지 나는 거리에 주름진 한 여성이 소년의 뒤에 서있다. 집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이 보였고, KBS의 이라크 현지보고 다큐에서 한 장면만이 대학 도서관에 있는 이라크 여대생의 목소리가 담겨졌다: '미국은 해방군이 아니라 침략군이다. 우리는 미국을 원하지 않는다'³⁾

인권감시(HRW)의 이라크 여성인권 관련 보고서는⁴⁾ 이라크의 여성들이 집 밖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성 폭력적 상황을 밝히면서 치안의 부재, 성 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 미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혜택 미비, 사회문화적 관습을 성폭력 피해의 악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이라크 경찰, 미군 경찰 공무원, 병원관계자, 비정부기구 등 70명을 인터뷰하여 조사한 이 보고서는 증가하는 여성인권의 침해 사례를 생생히 보여준다. 9살 어린 소

3) KBS 일요스페셜, 이라크 현지보고: 마그다드와 모습을 가다, 2003. 10.26일자.

4) *Climate of Fear: Sexual violence and abduction of women and girls in Baghdad*, July 2003, vol.15, no 7(E)

너나 15살의 소녀가 강간을 당하는가 하면, 49살의 한 여인은 납치되어 뜨거운 물과 담뱃불에 의해 화상을 입으며, 여러 번 강간을 당하는 고통을 겪은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은 공식적으로 범죄로 신고되거나,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이라크 경찰들은 이러한 일을 조사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경찰의 법적 진단서가 없이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관례 때문에,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치료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집안의 수치라는 오래된 사회문화적 관습에 따라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거나, 남성가족들에게 매를 맞거나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이중적 억압에 놓인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성폭력의 현실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이다. 거리에서든, 집에서든 여성의 두려움은 더 강화되고, 이는 여성을 집 안에 제한시키는 하나의 사회적 기제로 작용한다. 그들은 일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공적영역으로서의 진출에 제한을 받고, 그들의 역할이나 태도, 가치는 가내 영역에 국한되는 정치적 효과의 영향 하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은 단순히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욕망이 아니라, 전쟁의 한 무기(weapon)이며, 사회조직 구성에 있어서 성 통제외한 방법이다.

전후 복구의 과정은 파괴된 사회조직을 다시 건설하고 전 국민의 사회적 통합을 꾀하기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보수적인 가부장적 윤리와 가족주의에 의거하여 국가를 재건하고 국민들의 허무감과 혼란을 치유하여왔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에 두고, 정조 관리와 국민의 제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성을 통제하는 국가정책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었다. 6.25 전쟁 후에도 경숙한 여성의 역할은 더 강조되었고, 베트남 전쟁 후에도 국가를 위해 싸웠던 여성전사들의 역할은 온전한 시민권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여성들은 집 안의 여성성에 집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는 여성에게 성적 희롱을 하는 것도 이의 경우이다. 과연 이라크의 전후 재건 과정 속에서 여성의 주체

적 말하기와 동등한 시민권 획득을 위한 정책 마련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모를 일이다.

3.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국내의 여론조사는 특별히 젠더의 차이를 고려한 경우는 없었으나⁵⁾, 58.8%가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며(정부의 조사), 차츰, '비전투원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는 타협적인 입장으로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투터 한국군 두 번째 파병의 논쟁이 있기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부각되는 한 여인의 강한 목소리의 정치적 효과이다. 경제적 이익과 한미 동맹 관계성을 근거로 미국의 현 국제관계 노선을 지지하고 이라크의 한국군 파병을 주장하는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인 이 여인은 남성군인들과 정치가들 앞에서 당당하게 현 정세에서의 한국의 안보전략을 발제하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강한 의지로 전쟁의 합리성을 역설하는데, 그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왜 여성일까? 왜 국방부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전쟁의 지지를 대변하는 것일까?

이라크 침공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한 여인은 이라크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돌려나게 된 린치(Jessica Lynch)라는 미국군인이다. 구출과정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쉽지 않은 이라크 침략 과정에 군인들의 사기를 돋우고, 후방의 미국인에게 영웅이 되었다. 그 여인의 이미지 구성 뒤에 다른 포로들의 이야기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 두 여인의 존재는 전쟁과 여성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완전히 다른 측면

5) 이라크침공에 관한 미국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군사적 공격을 더 반대하고 외교적 노력을 12%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태도의 차이는 호주에서는 10%의 간격으로 나타나고, 영국에서는 남성보다 2배가 더 많은 여성이 이라크 침공에 영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Ruth Rosen, "Do you want war?", San Francisco Chronicle, February 27, 2003). 경험적으로, 국내 반전 가우 캠페인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서명운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만을 근거로 반드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화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화적이라는 단선적인 발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인력에 관한 남녀 차이는 최소한 여성들이 평화적합적 관계력을 더 담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본다.

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평화적이라는 전통적 담론을 깨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다. 전쟁과 관련하여 여성은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최근 여성들의 군대진출은 남녀평등의 한 지표로 해석되곤 한다. 2003년 이라크 침략 시, 미국적군의 15%인, 4만여명이 여성군인이라고 한다. 1991년 걸프전 시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군인들의 비율은 미국 11%, 캐나다 9.2%, 영국 5%, 프랑스 2.7%였다. 모간(Morgan)이라는 학자는 글로벌 정치학의 변화와 군사기술의 증진과 함께 여성들의 군대 진출은 군사주의-남성성-남성권력, 이 세 연관성의 고리를 끊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⁶⁾. 고도의 군사기술 발달은 강한 남성성과 어우러진 근육의 힘이 요구되는 전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군사영역의 엄격한 구분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문제는 남녀문제의 구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보인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개념은 포괄적 안보로의 이행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군사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군사안보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힘의 우위성이 전쟁을 억지하고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적과 아군의 이원화된 사고구조를 전제하여, 우리와 다른 타자의 차이와 낯설음을 인정하거나, 상호이해 하려고 하는 지향성이 아니라 적대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가치체제이다. 이는 군사화의 주요한 기반이 되는 안보논리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기존의 국가안보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군사안보를 해체시켜나가는 다양한 실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정치적으로 주체화된다는 것은 곧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의 주체자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만 해소될 수 없는 '평화'의 근본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6) Morgan D.H.J. (1994), "Theater of War: Combat the Military and Masculinities," in H. Brod and M. Kaufman, eds., *Theorizing Masculini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그동안 여성들이 전개한 평화운동은 군사안보의 일상적 폭력성과 가부장성을 비판하면서 군사안보 대신에 인간안보가 확장되어야할 것을 주장해왔다. 인간 안보란 가정과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일상적 삶에서의 폭력과 억압을 거부하는 권리, 다양성, 평등성, 자유로움, 삶에 대한 존중, 생태계 보존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최근 여성의 군대진출과 다국적군 참여의 증가가 곧 남녀평등의 징후인 것처럼 상징화하는 세태에 여성주의자들이 지향해야할 안보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시급한 안보는 경제적 안정과 치안유지, 여성존중과 평등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부와 자원의 착취가 아닌, 그들의 것은 그들에게 돌려주는 정책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이라크 국민들은 말한다. “한국군이 이라크에 온다는 것은 미군을 도와주러 오는 것이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들을 돕는 나라는 누구든지 우리에게서 침략군이다.”⁷⁾

3. 파병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남성들을 징병하고, 그의 일부 사병들을 무력감동이 한창인 이라크에 보낸다는 것은 국가중심의 동원이며, 군사관계와 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중심의 질서에 편승하여 국익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다면, 자신을 재식민화시키는 일이다. 군사주의적 동원과 참여의 추동력이 한미관계의 동맹성의 눈치보기에 있다면,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구성(정치성)은 여전히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 종속관계에 머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질서에 외해서 움직여지는 동원과 참여는 세계적 군사화의 흐름에 탑승하는 일이다.

7) MBC 시사대거전 2580. 두얼굴의 이라크. 2003.10.5일차: 시사대거전 2580. 이라크반군 인디터: 6인의 무자해단. 10월 19일차

남성들이 집을 나서서 전장으로 향하는 과정, 평범한 남성이 병사가 되는 과정에는 민족적 애국심과 민족적 정체성과 함께 전쟁과 일상이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남성은 누구인가라는 성 정체성과 젠더 관계성의 형성이 수반되는 과정을 가진다.

한국사회에서 한 남성이 군인이 된다는 것은 '남자로서' 당연한 것이며 '한번쯤은 군대를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왜 가야하지' 라고 의구심을 품지 않는 '당연함'은 국가적 차원의 군율이 개인의 삶의 규율과 만나는 지점이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국가안보에 동원되어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젊은 한때를 군대에서 보내는 것은 남성들의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담보하는 일이므로 자신의 자율적 몸의 통제권은 상실한 셈이다.

남성이 군인이 된다는 것은 전투력에 필요한 강한 (1)남성다움을 획득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성하는 방법은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을 혐오하고 부정하면서 '계집애가 아니라는 것',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나는 남성이다'는 의식은 국가의식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구성되고 집단적 남성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3)뿐만 아니라 남성다움은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기본 목표였던 한국사회에서 재정적 능력과 관련됨에 따라 가장의 책임감과 권위를 동반한다.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개인적 욕망과 가야만 하는 사회적 현실의 간극에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남성들을 자발적으로 동원가능케 하는 담론들이 필요하다.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 경제력이 자주국방과 동일시되는 경제발전주의, 충효의 유교전통 등이 뒷받침되면서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충성심이 요청된다. 특히 군사화된 남성들의 영웅적 이야기,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전사 이야기, 죽음의 선을 함께 넘기는 전우에 등은 군대 경험을 의미화하는데 주요한 담론으로 작동한다.

국가안보에 따른 남성 전사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는 정체성, 온전한 시민권의 획득, 군필자로서 경제적 우월성의 보장 등 가시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감정노동과 성적서비스라는 비가시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제를 통하여 인정받고 보상받고 있다.

4. 파병대신에 여성의 인권을 위해

1)평화운동은 근본적인 생활운동이다. 일상적인 여성의 삶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운동이다. : 적대감의 해소, 허구적 안보의 해체, 다양성 인정,

2)한국여성들이 이라크의 여성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라크 전후 재건 과정에서 여성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한국여성들의 연대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이라크여성연맹이나 이라크여성권리연합과의 만남과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베이징행동강령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시키도록 국제적 압력

1. 무력갈등을 해결하는 결정권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외국점령하에서 여성의 삶을 보호하는 것
2.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군비증대의 유용성을 통제하는 것
3. 갈등해결의 비폭력적인 형태를 고양시키고 인간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을 줄이는 것
4. 평화문화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의 활동을 조장하는 것
5. 피난여성이나 안전한 곳에 있지 못한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훈련을 제공하는 것
6. 식민지 또는 자통치 형태가 아닌 곳에서 여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여성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 여성 NGO 참여하기 / 이라크 현지 경찰관에게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성 자체 교육도 중요함.

3) 고정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성문화를 해체시키는 교육과 문화 생산

4) 언론미디어의 최근 경향성과 동원 그리고 국회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와 시민사회의 과제

정경관(평화를만드여성회 국제협력위원)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 변화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You must be the change you wish to see in the world. (M. Gandhi)

I. 전쟁 및 점령 근거에 대한 검토

1. 국제법적 근거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 헌장에 위반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및그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침략전쟁이다.

*유엔헌장 전문: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UN헌장(제2조 3항)에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진다.

*유엔헌장 제2조 4항: "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예외규정

하나는 UN 헌장 제51조 자위권 행사, 두 번째는 헌장 제53조와 107조의 2차대전시 舊敵國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특별 조항 해

당, 셋째는 상대국가가 무력위협, 무력사용 및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헌장 제39-43조에 의한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원칙에 위배되고 자위권의 행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이라크 민중을 해방시킨다는 미국의 명분과는 달리, 이라크 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될 날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미군과의 충돌로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

- 미국은 이라크가 미국을 상대로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침공을 감행하였다. 침공 직전까지 이라크의 무기폐기는 안전보장이사회 사찰단의 감시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내세웠으나, 지금도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단서조차 찾을 수 없다.

- 미국의 이라크 선제공격과 군사점령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행위이다.

2) 1946년 뉘른베르크 재판소(Nuremberg Tribunal)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국제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 내에 전체의 축적된 죄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다른 전쟁 범죄들과는 다른 최악의 국제 범죄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2. 대량살상무기 의혹

이라크 종전이 선언된 지 3개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미국과 영국이 전쟁 명분으로 삼아왔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1) 미국 정부의 조사단 조차 증거 제시 못함

이라크서베이그룹(Iraq Survey Group)은 이라크 점령된 미국, 영국, 호주의 정보기관 요원-생화학 무기 전문가들 약 1,40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3개월동안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조사한 후 중간보고서(Intrim Progress Report)에서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AP 통신 10월 2일)

2) 부시 대통령 이라크 전쟁 이전 거짓말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28일 국정연설에서 CIA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는 최근 사담 후세인이 상당량의 우라늄을 아프리카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었다.

- 2003년 7월 7 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볼 때, 이라크가 아프리카에서 우라늄을 구입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 했다는 내용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빠졌어야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7월 8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 CIA는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기 전 수개월 전에 이미 전직 대사인 조지프 C. 윌슨을 비밀리에 니제르에 파견, 영국 정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도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윌슨은 "영국이 말한 정보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같은 보고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3. 테러조직(알카에다)와 연계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 정부가 9.11 테러를 기획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리스트 조직 알 카에다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미국의 AP통신)

-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같은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민의 70%가 이라크와 9.11테러가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자 "우리는 사담 후세인이 9.11테러를 지시했다거나 통제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4. 석유자원 확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

- 1) 미국은 경제중심적 안보정책 (Econocentric security policy)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이해와 안보이해는 불가분의 관계 (our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are inextricably linked)"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1999* 라고 주장하고 사환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려하고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
- 2) 현재 이라크의 원유매장량은 세계 2위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해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원유매장량과 생산량>

	매장량(bbl)	세계의 %	생산량(mbd)
사우디	261.1	24.8	9.2
이라크	112.5	10.7	2.2
UAE	97.8	9.3	2.7
쿠웨이트	96.5	9.2	2.2
이란	89.7	8.5	3.8

3) 수요와 공급

❖ 점증하는 수요

세계인구: 26억 (50년) -> 60억 (99년) -> 80억 (2020)

GWP: 6조 달러 (50년) -> 41조 달러 (99년)

- ❖ 제한된 공급
원유매장량: 1 조330 억 배럴; 25 년 공급 가능
- ❖ 생산지에 분쟁 잠재
- ❖ 자원부족 -> 경쟁 -> 분쟁

4)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4월 16일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라크 석유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행보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전쟁 승리를 선언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나온 그의 발언이 전후 복구비용은 물론, 이라크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이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5. 정보조작의 시도들

- 이라크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연관성 문제를 둘러싼 정보조작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자가 그 정보를 정책적 필요에 맞춰 가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disinformation)를 전하여 이라크전쟁을 합리화하고 대중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시도되었다.

- 미국과 영국정부는 불확실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라크 침공 명분을 더하기 위해 첩보 수준에 지나지 않는 '정보'를 필요에 맞게 손질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후세인 정권 전복'(이른바 regime change)이라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정확히 말해 '정보'가 아닌 '첩보' 수준)를 꿰 맞추기 식으로 '맞춤정보'를 가공해 서로 주고 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1) 미국 부시행정부

(1) 이라크 니제르 우라늄 구입 정보 조작

-부시는 2003년 1월 28일 국정연설문에서 "영국정부는 최근 사담 후세인이 상당량의 우라늄을 아프리카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보유설은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과 '네오콘'(Neocon)이라 일컬어지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음모에서 비롯됐다. 부시의 국정연설 하루 전날 럽스펠드 국방은 펜타곤 기자회견에서 "후세인 체제는 핵무기 보유를 피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상당량의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던 게 최근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딕 체니 부통령, 폴 월포위츠 국방부장관도 비슷한 발언을 방송 인터뷰, 집회연설 등에서 하고 다녔다.

- 2002년 2월 조세프 C. 윌슨(전 가봉 주재 미 대사)은 영국이 제기한 이라크 우라늄 구입 '정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밀리 니제르를 방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하고 보고했으나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위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2003년 7월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내가 아프리카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이란 이름의 칼럼)

(2) 정보조작의 전원지, 미국방부 특수작전국(OSP: Office of Special Plans)과 근동-남아시아국(NESA: Near East and South Asia bureau)

미국 국방부 산하 근동남아시아국은 국방부 정책차관 페이스의 영역이며, 이라크전을 주창한 신보수주의정치가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주요 기지로서 역할을 했다. 국방부 특수작전국은 원래 도널드 럽스펠드 장관과 폴 월포위츠 부장관이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 사이 연계와 관련된 미 정보국이 모은 정보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무부의 퇴직장교, 국방부정보국(DIA), CIA의 퇴직장교들은 두 조직이 백악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라크관련 정보를 과장하고 조작했다고 비판하였다.

미 국방부내 특수작전국은 2002년 말 미 정보기관들의 방함에 핵심적 변화를 몰고 왔다. 작전국 소속 정책보좌관과 분석가들은 2001년 9.11테러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 수많은 정보평가서들을 작성해 이라크에 대한 미국 국내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미국의 다른 정보기관들의 자료와 아흐메드 칼라비가 이끄는 이라크 망명 반체제인사들의 단체 이라크국민평의회(INC)가 제공한 자료들에 의존했다. 2002년 가을 특수작전국의 활동은, 최소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가능성 및 알카에다와의 연계에 관한 대통령의 정보 소스였다. 특수작전국은 월포워츠와 그의 상관 럼즈펠드 장관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라크가 엄청난 양의 생화학무기는 물론 중동지역, 나아가 잠재적으로는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믿음이다.

자료: Jim Lobe, Politics-US: Pentagon Office Home to Neo-Con Network,

<http://www.ipsnews.net/interna.asp?idnews=19565>

세이무어 허시, '선별적 정보': 도널드 럼즈펠드는 자신만의 특별한 정보소스를 갖고 있다. 그 정보들은 과연 믿음만한가'

http://www.newyorker.com/fact/content/?030512fa_fact,
프레시안 2003-08-27 오전 10:42:30

(3) 부시행정부의 정보조작 비판

상위 정보위에서 활동한 바 있는 민주당 출신 전 상위의원 밥 커리는 "그러나 그들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용인할 수 있는 선 이상으로 확대해석했다. 아마도 부시행정부의 강경파들은 미 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라크를 해방시키고 독재자를 몰아내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

은 대량살상무기와의 연계를 만들어내야 했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라크 침공과 9.11테러와는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방치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주장 중에 가장 취약하며 가장 오도의 위협이 높은 주장이다.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들이 (그 정보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http://www.newyorker.com/fact/content/?030512fa_fact) 프레시안 2003-08-27 오전 10:42:30

2) 영국 정부

(1) 7월 18일 데이비드 켈리 박사(전 영국 국방부 고문, 생화학무기 전문가) 변사사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둘러싼 BBC, 국방부, 정부부의 갈등 속에서 BBC 보도의 취재원으로 의심받던 데이비드 켈리 박사(전 영국 국방부 고문, 생화학무기 전문가)는 의회 외부위원회 소환을 받고 BBC 보도 내용에 관한 심의에 응한후 국방부 소환을 앞두고 자살하였다.

- "앨리스테어 캠벨 공보수석이 "이라크는 공격명령을 내린 뒤 45분 안에 생물·화학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영국 통합정보위(Joint Intelligence Committee, 약칭 JIC) 보고서에 삼입하도록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들어있다.

관련

링크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3181429.stm

- 이라크 관련 문건을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정부당국자간 이메일들이 영국 의회의 켈리박사 자살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공개된 캠벨 공보수석의 이메일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JS 및 줄

리언 M과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문건을 제작성하고 대폭적으로 개작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미국 측에 건네줄 것"이란 문구다. 내용 가운데 JS는 합동정보위원회 의장 존 스칼렛을 의미하며, 줄리언 M은 총리실 정보평가담당 수석보좌관인 줄리언 밀리로 전해졌다.

- 자살사건 진상조사를 맡은 영국 브라이언 허튼 판사는 최근 무려 9천쪽 분량의 문건을 인터넷에 올리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영국 총리실과 국방부, 그리고 BBC 등에서 제출한 문건들이다. 여기에는 캠벨(총리실 공보수석)과 스칼렛(통합정보위원회 의장), 이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건의 데모와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다

허튼 특별조사

(The Hutton Inquiry·www.the-hutton-inquiry.org.uk)

6. 전쟁 이후 미, 영 주도세력들의 영향력 축소

1) 영국 블레어 정부 신뢰도 하락

- 7월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지는 " 영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 후 재건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대량살상무기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연 전쟁에 참가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느냐에 대한 영국 국민과 언론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정적 계기는 BBC 보도의 취재원으로 의심받은 한 국방 과학자(데이비드 켈리)가 18일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심증으로 블레어 총리의 오른팔로 불리는 앨리스테어 캠벨 공보수석과 제프 훈 국방장관이 이 사건을 지휘한 배후 인물로 믿고 있다.

-8월 15일(현지시간) 영국 국민가운데 6%만이 "블레어 정부가 언

론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응답해 블레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8%의 국민은 정부가 켈리박사 문제를 다루는 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24%의 국민만이 정부의 이라크 문건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리고 52%의 국민은 정부의 이라크전 관련 정보조작의혹과 관련 정부와 BBC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디언 지와 여론조사기관인 ICM이 공동으로 8월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 사이에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 8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데이비드 켈리 박사의 죽음에 대한 조사로 인해 블레어 정권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47%가 블레어 총리의 사임에 찬성한 것이다. 27%만이 블레어 총리의 유임을 지지했는데, 이는 지난 99년 74%였던 블레어 총리에 대한 지지도와 크게 대비된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블레어 총리가 국가 전체보다는 자기 자신과 노동당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22%만이 블레어 정부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답해, 지난 총선 때 56%였던 긍정적 평가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블레어 총리를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59%에 달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 8월 29일)

2) 미국정부 지지도 하락

(1) 유에스에이 투데이/ CNN/ 갤럽 조사 2003년 10월 24-26일

성인 1,006명 조사

<http://www.usatoday.com/news/polls/tables/live/2003-10-27-bush-poll.htm>

10/27/2003 - Updated 03:31 PM ET

1.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간	예	아니오	무응답
2003년 10월 24-26일	53	42	5
2003 5월 19-21일	66	30	4
2002 10월 21-22일	67	28	5
2002 3월 8-9일	80	14	6

2.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찬성/반대하는가?

기간	찬성	반대	무응답
2003 10월 24-26일	54	43	3
2003 4월 22-23일	71	26	3
2003 4월 10일	72	22	6

3. 이라크와 주요전투 종식후 미국이 이라크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기간	인정	불인정	무응답
2003 10월 24-26일	47	50	3
2003 4월 22-23일	80	18	2

4. 미국의 이라크전이 미국생활에 긍정적/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별영향이 없었는가?

기간	긍정적	부정적	별영향이 없었다	무응답
2003 10월 24-26일	32	33	33	2
2003 4월 22-23 ^	52	18	29	1

10. 이라크에 미군수를 증강/ 유지/일부 철수/전부 철수 해야 하는가?

기간	증강	유지	일부철수	전부철수	무응답
2003 10월 24-26일	14	27	39	18	2
2003 8월 25-26일	15	36	32	14	3

(2) 뉴스위크 10월 9일-10일 조사

미국인중 기성 정치권이 국가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으며 70%는 정치가 특정세력과 당파정치에 좌우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중 54%는 현재 미국이 돌아가는 양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40%에 그쳤다.

이는 6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만족을, 41%가 불만을 표시한 데서 완전히역전된 것으로 같은 조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11 테러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등록된 유권자들 중 44%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대답했으나 테러와 국토 안보문제가 경제만큼 중요하다는 대답은 37%,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대답은 16%로 나타나 테러 대책이 더 큰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미국의 이라크 개입으로 미국인이 장차 테러로 살상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대답은 37%, 줄어들 것이라는 대답은 25%였으며 30%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라크에 안정된 민주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대답은 35%, '어느 정도 믿는다'는 대답은 17%로 절반 이상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24%는 '그다지 믿지 않는다', 19%는 '전혀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응답자의 56%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 지난 7월말에 비해서는 12% 포인트가 떨어졌으며 49%는 부시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정보를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분석한 것으로, 39%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고 대답했다.

- 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로 대중을 오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5%로 나뉘었으며 10%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조사에서는 정부가 고의로 오도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Newsweek Poll: A Growing Dissatisfaction, 13 October, 2003

<http://www.msnbc.com/news/978672.asp?0cv=KB20&cp1=1>

(3) NYT와 CBS 서베이에서 44 %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에 부정적, 53% 이라크전쟁이 가치가 있는 지 의심, 56%가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2003.10.4 인디펜던트)

(4) 9.11 테러 2주년을 맞아 USA 투데이와 CNN 방송 및 갤럽 등이 공동 실시, 9월12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만이 부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라크전이 진행중이던 지난 4월, 71%의 지지율에서 19% 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9.11테러 이후 90%의 지지도에서는 4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수치다.

이처럼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과 미 행정부가 초기 예측한 것보다 더 곤혹스럽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이라크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라크 전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둔 미군 사상자와 이라크 내 게릴라식 테러,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및 반(反)부시 진영의 강도높은 비판 등은 상당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상황뿐 아니라 대이라크 전에 대한 지지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후정책에 대해 51%의 미국민만이 지지한다는 뜻을 보였다. 또 이라크 상황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선 여론조사이후 처음으로 50%를 밀돌아 47%의 만족도에 그쳤다.

3) 알 자지라 여론 조사

(1) 알 자지라 영문사이트(<http://english.aljazeera.net>)가 연인원 7만7천여명의 접속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테러전쟁이 시작된 후 세계가 안전하게 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아니다'고 답한 사람이 65%에 이르러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실패작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미국이 중동 문제에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서 공정한 중재자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72%가 '아니오'라고 답했고, 28%만이 공정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는 또 계속되는 게릴라전과 날로 늘어만 가는 미군 사망자 수로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서 '아니오'는 28%, 모르겠다는 7%에 불과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석유 장악을 위해', 23%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위해서'는 33%에 불과했다.

이같은 알 자지라의 여론조사 결과는 알 자지라 이용자의 대다수가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지역 지식인과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아랍지역의 반미감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이라크 지역의 정세가 한층 험악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관련 링크 (<http://english.aljazeera.net>)

프레시안 9월 19일

(2) 10월 23일 알지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해야만 하고 유엔이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은 72%, 반대는 24%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는 21,840명이 참가했다.

<http://english.aljazeera.net/NR/exeres/890500CB-E84E-4E17-ACB5-768A7FBF3670.htm>(10월 23일)

(3) 이라크 조사 및 전략연구센터가 이라크 7개도시(바그다드, 바스라, 나지프, 라마디, 팔루자 등) 주민 162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답했다. 4월 9일 미군이 바그다드에 진입했던 당시에 46%만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보다 그해 늘어난 것이다. 치안상황에 대해선 46%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전보다 나아졌다는 이는 23%에 지나지 않았다. (AFP통신 10월 23일, 한겨레 10월 25일)

II. 미국의 이라크 진후 통치에 대한 검토

1. 미국의 전후 통치 과정

미국정부는 미국의 독점적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과도정부, 과도통치위원회, 과도내각을 구성하였다.

1) 가너와 후임자 폴 브래머

(1) 제이 가너와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

- 2003년 4월8일 부시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후 이라크 신정권 수립을 위한 4단계 실행계획(로드맵)을 확정했다.

미군정(3개월)→과도정부(9개월)→제헌의회소집→국민투표 및 신정부 출범(2년 이내)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이라크 재건과 인도적 지원처'(ORHA, the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를 설치하고 치안확립 및 사회복지에 나섰다.

- 2003년 4월 15일 이라크전 직후 최초의 이라크 군정은 이라크 재건·인도 지원처(ORHA)였다.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장은 제이 가

너(64) 예비역 미 육군 중장이 맡았다.

-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의 주요성원은 2003년 2월말, 미국방부가 설립한 이라크 재건발전평의회(The Iraqi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ouncil)의 구성원이다. 이 평의회는 바스정권 축출 이후 임시정부의 주요역할을 할 망명이라크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평의회는 미국 버지니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2003년 4월말 이라크재건인도지원처의 설립과 함께 주요성원이 바그다드로 왔다.

- 이라크재건발전평의회 주요 인사들은 제이 가너 재건인도주지원처장, 미국 관료, 영국 관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전후 이라크 행정부에 주요 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 이라크재건발전평의회 인사들은 다른 망명인사들은 물론 이라크 내 주요 세력들과는 달리 자유주의와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지원팀을 이끄는 예마드 디하는 계약회사 회이자의 간부이며, 지원팀 내 중요 인물 가운데 한명인 핵과학자 키드히르 함자는 1990년 중반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움을 받은 망명인사이다.

- 지원팀 구성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높았다. 일부 이라크 망명 지도자들은 지원팀 구성의 폭이 너무 좁으며 이라크의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는 월포워츠 부장관과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이 지나치게 판권됐다고 지적했다.

자료: <http://middleeastreference.org.uk/irdc.html> 및 국내신문

(2) 제이 가너 처장 자격 논란

제이 가너 처장이 미사일 유도시스템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SY 플먼 테크놀러지에 입사했고 휴직만 한 채 처장직을 수락. 가너 처장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고, 유대인 국가안보문제연구소와 관계를 맺은 전력으로 아랍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미사일 전문가로 이스라엘에 페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주도했다.

가너의 면모는 군산복합체 헬리버튼사의 회장을 지낸 딕 체니 부통령이나 백텔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럽즈펠드 국방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걸프전 때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니는 가너와 처음 인연을 맺은 뒤, 가너를 이라크 재건사업에 끌어들이었다. 럽즈펠드와는 미사일방어사업에서 굳건한 우애를 과시했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유엔은 가너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가졌다.

YTN 2003-04-21 18:15:00. 한겨레21 2003-04-16 04:55:00

(3) L.폴 브레머 3세 연합임시행정처 행정관

침공에 몰두한 나머지 치밀한 전후 통치구상을 소홀히 한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점령 한달 남짓 만에 제이 가너 재건인도지원처장을 포함한 재건인도지원처의 상당수를 교체했다. 5월 6일 L.폴 브레머 3세가 이라크대통령특사로 지명되고 연합임시행정처행정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브레머는 대테러 전문가이며 외교관이다.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제이 가너는 친이스라엘계 전력과 미 국방·국무부의 재건 주도권 다툼 등이 맞물려 브레머로 책임자가 바뀐 것이다.

자료: <http://cpa-iraq.org/bios/> 와 국내 신문

2)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성립과정의 논란

(1) 과도 정부 수립을 위한 첫 회의(2003년 4월 15일)

미국의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이라크 과도정부 지도부를 선정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강행했다.

-남부 도시 누르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미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미국측에서는 제이 가너 이라크재건·인도지원 처장과 백악관 특사 칼마이 할릴자드 등이, 이라크측에서는 이

슬람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 대표, 해외 망명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 민주정부, 연방주의, 다원주의, 바트당 해체 등 새정부 구성의 13개 원칙을 발표

- 상당수의 시아파 지도자들이 '미국 주도의 과도정부 반대'를 내걸며 불참.

* 이라크 최대 시아파 반체제 단체인 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의 지도자는 압둘 아 지즈 아킴은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과도정부가 필요하다"고 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 오랜 망명 끝에 4월 14일 이라크로 돌아온 시아파 단체 다와당의 지도자 모하메드 바크르 나스리도 알 바이프 사원에서 미국 주도의 반체제 회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반체제 정당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선언했으나 친미 인사들만 참석했다"며 "이라크 국민은 미국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라크국민회의(INC) 의장도 불참을 통보하고 대리인을 회의에 보냈다.

- 나시리아에서는 시아파 주민 2만여명이 '미국 반대' '후세인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반미시위를 벌였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조차 제이 가너가 이라크 과도정부를 이끄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라크인들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03-04-16 18:24:03 등

(2) 2차회의(2003년 4월 28일)

- 주요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미군정 책임자들과 이라크내 각 정파 대표자들은 바그다드에서 회의를 갖고 앞으로 한달안에 이라크 과도정부를 선출하기 위한 확대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 8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둘러싸고 참석

자들간에 극심한 분열상이 노출됐으며 시아파 이슬람 신도 수천명이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제이 가너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장과 잘마이 칼릴자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특사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라크국민회의(INC) 및 쿠르드민주당(KDP), 쿠르트에국동맹(PDK) 소속 인사 등 각 정파와 부족 지도자 250명 정도가 참석했다.

- 시아파 이슬람 단체 '이슬람혁명최고회의(SAIRI)'도 이번 회의에는 격은 낮지만 일부 인사들을 참석시켰다.

- 이 회의도중 미군의 점령기간과 향후 정부구성에서 이슬람의 역할 문제와 관련해 참석자들간에 큰 의견차가 노출됐다. 이라크 해외망명인사들을 포함해 일부 참석자들은 미군이 신속히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권하에서 직접적인 탄압을 받아온 인사들은 이라크의 즉각적인 자치능력에 회의감을 표시하며 과도정부기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 시아파 대표들은 또 이번 회의 참가자수에서 이라크 전체인구중 60%정도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후세인 정권을 대신할 정부를 선택하는 데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은 이라크에 시아파 주도로 이란과 유사한 신권정치체제가 들어서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2003-04-29 08:30:23, 중앙일보 2003-04-30 00:26:34

(3) 이라크 과도정부 구성 난항

미국 정부는 5월 각 정파와 종족 대표들로 구성된 대규모 회의를 거쳐 망명인사들을 중심으로 과도정부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라크 반체제 인사들이 이라크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군정 통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해 브레머 행정관은 5월 16일

밤 이라크 정치지도자 7인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와 모임에서 미영
 연합국 관리들이 당분간 이라크 통치를 계속 담당하겠다는 결정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라크 정치단체의 반발이 커져 브레머 임시행정
 처 행정관은 25~30명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를 만들어 과도정
 부 구성작업을 맡기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이것은 이라크인이 아니
 라 미국 정부가 인선을 직접 맡는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7월 7일 이라크 7개 주요정치단체 대표들은 미국이 임명하는
 25~30인의 과도통치위원회(IGC)안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행정권을
 가진 IGC안을 수용하겠다고 다만 위원회가 이라크 인구 구성비율에
 따라 정치, 종교, 인종을 대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
 의에는 쿠르드 민주당, 쿠르드 애국 동맹, 시아파 단체인 이슬람혁명
 혁명회의, 시아파 다와당, 수니파 대표 나세르 알 차테르치, 이라크
 국민회의, 이라크 국민단합운동 등 후세인에 반대했던 주요 정치 단
 체 대표가 참가했다. 그동안 이라크 정파들은 이제까지 IGC는 이라
 크인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아파 정치
 단체 등은 직접 선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불참하지
 않겠다고 버티어왔다.

매일경제 2003-05-18 17:36:01, 한겨레 2003-06-18
 21:12:00, 한겨레 2003-06-29 20:21:02, 경향신문
 2003-07-05 12:42:01 등

2. 이라크 통치구조 개요

1) 연합임시행정처(CPA: 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http://www.cpa-iraq.org/>

- 이라크의 합법정부 수립시까지 최고통치기구로서의 역할 담당
- 과도통치위원회와 협력하여 과도내각 수립, 헌법제정위원회 구성
등 이라크공식정부 출범 추진

<도표> 연합임시행정처 참고자료

<http://www.cpa-iraq.org/CPAorgchart.pdf>

2)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IGC: Iraq's Intrim Governing Council)

- 7월 13일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출범.
- 연합임시행정처에서 정치, 종교, 종족에 따라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총25명 지명(시아파 13, 수니파 5, 쿠르드 5, 투르크만 1, 기독교1)
- 임시 내각 지명하고 연합임시행정처와 정책, 예산, 새헌법 제정 절차 등을 논의
- 7월 30일 위원회는 통치위원중 9명을 한번에 1개월씩 임기를 갖는 순환대통령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 이라크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치위원의 다수가 걸프 전이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오랜 외국에 망명생활을 했거나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 위원회의 아랍계 18명중 9명은 1991년 이래로 남부-중부 이라크(south-centre Iraq)에 있지 않았고, 순환대통령의 9명중 8명은 1991-2003년 사이에 남부-중부 이라크에 있지 않았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구성>

이름/ 종교, 분파/종족/성별/ 소속 기관

- 1) Ibrahim al-Ja'fari, 시아, 아랍인, 남성, 다와
- 2) Ahmad Chalabi, 시아, 아랍인, 남성, 이라크국민회의
- 3) Muhammad Bahr al-'Ulum, 시아, 아랍인, 남성, Ahl al-Bayt
See separate biography here.
- 4) 'Abd al-Aziz al-Hakim 시아, 아랍인, 남성, SCIRI

- 5) Jalal Talabani 수니, 쿠르드, 남성, 쿠르드예국연맹(PUK)
- 6) Mas'ud Barzani 수니, 쿠르드, 남성, 쿠르드민주당(KDP)
- 7) Iyad 'Alawi 시아, 아랍인, 남성, 이라크국민협정(INA)
- 8) Adnan Bajaji 수니, 아랍인, 남성, 독립민주당의자 운동(DCT / IDM)
- 9) Muhsin 'Abd al-Hamid 수니, 아랍인, 남성, 이라크이슬람당(IIP)
- 10) Ahmad Shya'a al-Barak al-Bu Sultan 시아, 아랍인, 남성, 이라크변호사연맹I
- 11) Nasir Kamil al-Jadurji, 시아, 아랍인, 남성, 민족민주당(NDP)
- 12) Aqila al-Hashimi, 시아, 아랍인, 여성, 2003년 9월 20일 지격 당함, 25일 사망
- 13) Raja' Habib al-Khuza'i, 시아, 아랍인, 여성 디와리야 산부인과 원장, 1960년대 후반부터 1977년 영국 거주
- 14) Hamid Majid Musa, 시아, 아랍인, 남성, 이라크공산당(ICP)
- 15) Ghazi Mashal Ajil al-Yawir, 수니, 아랍인, 남성, 민간 엔지니어로서 사우디아라비아 히잡 테크날로지사의 부회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까지 15년 거주, 사미르 부족장의 친척
- 16) Samir Shakir Mahmud, 수니, 아랍인, 남성, 수마이디 부족의 성원
- 17) Mahmud Ali Uthman, 수니, 쿠르드, 남성
- 18) Salah al-Din Muhammad Baha' al-Din 수니, 쿠르드, 남성, 쿠르드이슬람연맹(KIU)
- 19) Younadem Yusif Kana, 아시리아 기독교인, 남성, 아시리아민주운동
- 20) Mu'afak al-Rubiy'i, 시아, 아랍인, 남성, 의사, 구다와당원, 영국에서 활동했음
- 21) Dara Nur al-Zin, 수니, 쿠르드, 남성
- 22) Songhul Chapouk, 트르크한, 여성, 이라크여성조직
- 23) Wa'il 'Abd al-Latif, 시아, 아랍인, 남성, 판사, 2003년 7월 4일 바스라주지사료 지명

24) 'Abd al-Karim Mahmud al-Muhammadawi 시아, 아랍인, 남성, Hizbullah, 남부 남부 습지 지역에서 17년동안 바트당에 저항 주도

25) 'Izz al-Din Salim, 시아, 아랍인, 남성, 바스라 이슬람 다와 (Islamic Da'wa of Basra)

자료: al-Mustaqbal; AP / New York Times "thumbnail sketches"; Juan Cole's writings; various articles (especially AP, Reuters, LA Times and Financial Times) of 31 July 2003.
*<http://middleeastreference.org.uk/iraqgc.html>

3) 과도통치위 과도내각 발표

9월 1일 발표된 과도내각 25명은 시아 13, 수니 5, 쿠르드 5, 무르크 1, 아시리아 기독교인 1인으로 과도통치위원회와 같이 정치, 종교, 종족에 따라 배분하였다.

(http://www.usatoday.com/news/world/iraq/2003-09-01-iraqi-cabinet_x.htm)

<이라크 과도내각 명단>

이름, 소속정당, 부처(장관)

Hoshyar Zebari, 쿠르드민주당, 외무부

Ibrahim Muhammad Bahr al-'Ulum, 석유부

Kamil Mubdir al-Kaylani, 이라크국민회의, 재정회계부

Nuri al-Badran, 이라크국민협정, 내무부

Hisham 'Abd al-Rahman al-Shibli, 민족민주당, 사법부

Ali 'Alawi 무역부

Ala 'Abd al-Sahib al-Alwan, 교육부

Ayham al-Samarra'i, DCT/IDM, 전기부

Nasreen Mustafa Siddiq Barwari, 공공사업부
 Khodayyir Abbas, 다와당, 보건부
 Ziyad 'Abd al-Razzaq Muhammad Aswad, 이라크이슬람당, 고등
 교육부
 Bayan Baqir Solagh, SCIRI, 주거건설부
 Rashad Mandan Omar, 과학기술부
 Mufid Muhammad Jawad al-Jazairi, ICP, 문화부
 'Abd al-Basit Turki, 인권부
 Muhammad Tawfiq Rahim, 쿠르드애국연맹, 산업자원부
 Sami Azara al-Majun, 국가개혁운동, 노동 사회부
 Muhammad Jasim Khudayyir SCIRI, 이민부
 Mahdi Hafez, 독립민주운동(IDM), 계획부
 Latif Rashid, PUK, 수자원부
 Haidar Jawad al-Abadi, 다와당, 통신부
 Abd al-Amir Abbud Rahima 민족민주당, 농림부
 Behnam Ziya Bulis, 수송전산통신부
 Abd al-Rahman Sadiq Karim, 환경부
 Ali Fa'iq al-Ghadhban, SCIRI, 청년체육부

자료: "Iraq's post-war cabinet", BBC News Online, 1 Sept
 2003.

<http://middleeastreference.org.uk/iraqministers.html>

4) 연합임시행정체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간 갈등

- 연합임시행정체(CPA)는 그동안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와 치안이나 경제, 범죄 수사 등의 각 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만들어가려 했으나 과도통치위원회 위원들은 미 임시행정체의 독단적 행동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

"임시행정처의 독단전행이 눈에 띄게 증가해 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10월 9일 일본 지지통신의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와 인터뷰)

- 과도통치위원회의 이러한 불만은 또한 미군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비난 속에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 이라크인들은 이러한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 별다른 권한이 부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라고 있지 않다"(10월 9일 일본 지지통신의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와 인터뷰)

자료: 프레시안 10월 9일

<참조> 이라크 주요정치일정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침공

4월 14일 사실상 종전선언

4월 15일 임시과도정부 1차준비모임 (제이 가너 이라크 재건 인도 지원처장 내정자 참여)

4월 28일 임시과도정부 2차준비모임

5월 1일 부시미대통령 종전선언 "미국에서 대규모의 군사작전이 끝났다"

5월 6일 L. 폴 브레머3세 미대통령 이라크복사 및 연합임시행정처 행정관 임명

5월 16일 브레머 행정관, 바트당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바트당원의 공직 취임을 금지 하는 조치 취함

5월 23일 미군정, 이라크 국방부와 군대의 해체를 선포하고 이를 대신할 '비정치적인' 군대가 창설될 것이라고 발표

7월 7일 이라크 7개 주요정치단체 대표, 미국이 임명하는 25-30인의 과도통치위원회안 수용

7월 13일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결성
 8월 13일 헌법제정위원회 설립 준비위 발족
 9월 1일 이라크과도내각 수립
 12월 15일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헌법제정과 총선일정 시간표 제시
 마감일

3. 이라크 정치조직

이라크의 정치조직은 크게 나눌 때, 전국조직으로 민간세속그룹, 종교그룹, 장교그룹으로, 그리고 지역조직으로 쿠르드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라크정치그룹은 종족적 차이, 종교적 차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수십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http://middleeastreference.org.uk/iraqiopposition.html>, 경향신문 2003-10-12 18:38:00.

1) 전국 민간 세속 그룹

(1) 이라크민족회의(INC, Iraqi National Congress, al-Mu'tamar al-Watani al-Iraqi)

1992년 반정부단체들을 위한 연합조직으로서 창립되고 아흐마드 칼라비가 지도하고 있다.

1990년 12월 다마스쿠스에서 창립된 공동행동위원회에 기반해 창립, 창립 회의에 16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 KDP와 PUK 참여, SCIRI와 다와당은 준비작업과 간여하고 움직임을 보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다.

런던에 외부 기지가 있고 1992년부터 이라크에는 살라후딘에 기지가 있어 1994년에 시작된 쿠르드 내부 투쟁후에 KDP와 PUK 분쟁을 중재하기도 했다.

사담 후세인의 전복과 민주적 연방 국가를 지지.

1995년 이후 다와당, 이라크민주연맹, 아랍 민족주의자정당 등 INC 소속 많은 구성그룹이 INC에서 철수.

CIA의 지원과 초기부터 미국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1990년대 초반에 1억달러 이상 받았다. 1998년 이라크해방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군사장비 구입, 미국방부에서 훈련을 받고, 시설설치 등을 지원했다.

2002년 10월부터 찰라비는 바트정부 축출 이후 INC가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2003년 2월에 미국도 잠정적으로 동의했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방부의 지원하에 이라크 북부에 북부할 이라크해방군이라는 준군사조직을 총원했다. 미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동안 미국군대와 함께 이 중 100명이 이라크인들과 연락하는 수행원으로 북부하고 자유이라크군(FIF, Free Iraqi Forces)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연합임시행정처아래에서 FIF는 금지되었다.

(2) 이라크국민협정(INA, Iraqi National Accord, al-Wifaq)

1990년에 사우디 왕자 파이잘의 주도아래 조직.

INA가 공동행동위원회 참가를 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아래 라디오 방송국 * 자유이라크소리"라는 라디오 방송국을 개설했다.

INA는 반정부단체들을 조정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하고 2002년 12월에 미국의 주도하에 세워진 후속위원회에 여러 직책을 가졌다. 알라위는 2003년 5월에 지도위원회 선출되고 과도통치위원회에서 INA를 대변하며 9명의 순번대통령 중에서 1명이다.

주간 신문 바그다드Baghdad를 발간하고 있다.

(3) 이라크공산당(ICP, Iraqi Communist Party, al-Hizb al-Shuyu'i al-Iraqi)

1934년 3월 31일 창립되고 1940년대 초에 중요한 역할 수행했다. 도시 시아공동체와 쿠르드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 쿠르드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최초의 전

국적인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전선 조직으로는 평화빨치산(Partisans of Peace)이 있고, 평화빨치산은 민족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과 공동 활동을 하기도 했다.

정치노선은 혁명보다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입헌민주정부와 연방주의 추구를 한다.

1963년 쿠데타이후 바트당은 이라크공산당원을 억압했다.

1980-88전쟁에서 이란을 지원하고 민족민주전선을 창조하는 데 이용. 쿠르드 정부는 쿠르드공산당으로 개칭했다.

외국의 간섭없는 사담 후세인 전복, 제재 철폐, 민주주의의 성립과 이라크 연대감 주장

2003년 4월 이라크 재건모임에 초청받지 않았지만 과도통치위와 임시 내각에 참여 재건과정에서 강력한 유연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4) 민족민주당(NDP, al-Hizb al-Watani al-Dimuqrati)

1946년 조직, 사회민주주의와 정치개혁에 초점, 국제문제 제한적 개입, 주요지지자들은 카질정부(1958-63)를 구성, 1962년 초부터 내부 분쟁, 쇠퇴

2003년 바트세력 제거후 나시르 자디르지의 주도하에 부활. 나시르 자디르지는 민족민주운동을 조직하고 이 단체는 2003년 5월 미군정과 협력하는 "group of seven"의 성원이 된다.

(5) 민주중도경향(DCT)/독립민주운동(IDM),

이라크외무부장관(1966-1967)이며 유연대사(1959-65, 1967-68)였던 아난 파카치(Adnan Pachachi)가 지도. 2003년 2월 미국 대통령 특사인 잘마이 카필자드가 파카치를 이라크정부의 주요 지도자로 고려하면서 DCT에 대한 관심이 부활. 2003년 2월 파카치는 IDM을 설립했다. 국무부는 IDM을 선호하지만 국방부는 반대하고 있다. 파카치는 이라크미군정과 협조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선포했다. 파카치는 UN이 운영하는 과도기를 지지하고 있다. 바트당 축출후 미국 기업과 계약을 맺는 과정을 반대했다. 이라크에 5월 초에 귀국해 이라

크과도통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순환대통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외 조직: 입헌군주운동, 자유이라크평의회, 아랍 사회주의 바트당-이라크 지부, 혁명노동자당(RWP), 이라크노동자공산당(IWCP), 이라크조국당, 이라크민족동맹 등이 있다.

2) 전국 이슬람 그룹

(1) 다와당(al-Da'wa al-Islamiyya)

1957년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정치종교적 집단화과정에서 1957-58년 성립. 시아조직으로 알려졌지만 수니파 구성원(1980년대 약 10%)을 포함하고 수니 이슬람 그룹들과 긴밀히 조정했다.

공동체는 성직자의 해석을 통한 이슬람 법의 지배. 나지프의 무신 알하킴(Muhsin al-Hakim)의 지지를 받았음. 다와당은 나지프와 카르바라지역에서 가장 강력했으며 연구 서클을 통해 강력한 반세속 혁명의제를 개발했다.

무신 알하킴 사후 (1970년 6월) 시아파 이슬람인들은 모하메드 바크르 알하킴(Muhammad Baq al-Hakim)에게 정치적 충성을 하고 있다.

1975년부터 바트정부는 나자프로부터 카르바라까지 매년 행진을 금지했지만 1977년 다와당은 이 행진을 조직하였고 이 때문에 경찰의 공격을 받아 남부 이라크 시아파 사이에서 저항을 조직하였다. 바트정부는 모하메드 바크르 알하킴을 체포하고, 그는 반정부 시아파 지도자로 유명하게 되었다. 다와당은 이란 이슬람혁명을 강력히 지지하고 다와당 지도자들은 호메이니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1979년 다와당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면서 공개적으로 폭력적인 저항과 혁명적인 전술을 채택하고 군사조직을 형성했다.

1980년부터 바트정권이 축출될 때까지 테헤란에 주요 근거지가 있었고 이라크에

이슬람 국가 성립을 지지했다. 1982년이래로 다와당과 SCIRI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SCIRI가 다와당보다 이란 정부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다와당은 SCIRI보다 이란 노선으로부터 보다 많은 독립을 추구했다. 다와당내 런던지부와 이란지부는 분쟁이 심해 이후 다와당 분열에 기여했다.

1991년 전쟁후 다와는 공동위원회에서 주요 역할하고 1992년 INC모임에 참석했지만 1995년 INC에서 철수.

2003년 4월 15일 이라크 임시정부 준비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재이 가니에 대항하는 시위를 조직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미군정과 공동작업하는 2003년 5월 7일 "group of seven"의 구성원이 되고 과도통치위에 2명의 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주간신문 알-지하드

(2)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 Supreme Council for the Islamic Revolution in Iraq, al-Majlis al-Al'a lil-Thawra al-Islamiyya fi al-'Iraq)

시아파 정치그룹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지지자들은 남부 이라크에 살고 테헤란에 근거지가 있다. 1982년 11월 17일에 이란의 지원하에 성립되고 모하메드 바크르 알하킴이 1985년까지 지도하고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했다. 창립 초기부터 수니파를 포함한 모든 이슬람교도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이란을 세제이슬람 혁명의 토대라고 주장했다. 이란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의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해 이라크 바트정권을 미국과 소련의 지지를 받는 제국주의로 규정했다. 1982년 모하메드 바크르 알하킴이 이슬람과 제국주의의 투쟁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SCIRI는 마스라 지역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활동했다. 1983년에 하지 음란에 약 200명의 군대를 조직했는데 군인은 1980-88년 전쟁시기 이란에 잡힌 이라크 시아파전쟁포로에서 충원했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구실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비판하고 미국전쟁을 반대했다. 1999년 INC 참가 중단.

SCIRI의 현재 역량에 대해 평가는 다양하다. 전체 만명의 게릴라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SCIRI는 바트정권이 축출되기 전에 8000명이 남부와 중부 이라크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8년 미국의 이라크해방법에 따라 미국이 이들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이 제의를 거부했다. 2001년 12월 사담 후세인을 퇴장시키기 위해 외부의 군사적 개입을 환영했지만 2002년초 부시대통령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고 이것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의 허가를 받으며 미국과 접촉을 계속해, 압드 알 아지즈 알 하킴이 주도하는 대표단이 2002년 미국워싱턴 회의에 참가했다. 2002년 9월 KDP와 군사협력 동의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반대했지만 2002년 10월 미국이 사담 후세인이후 정부를 세우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원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시 SCIRI는 미군에 반대하지 말고 중립성을 유지했으며, 유엔이 이라크정부를 장악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행정부가 발족하자 미국 조치에 반대하고 2003년 4월 15일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거부하고 4월 28일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2차 준비모임에 낮은 직급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주요 기지는 쿠트에 있다. SCIRI는 현재 이라크에서 미군 주둔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과도기 후에 이라크인의 다수 지지를 통해 이슬람 국가를 형성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은 SCIRI 사무실을 점거해 무기를 수거하고 비무장을 추구하고 있다. SCIRI 산하 바트르 여단은 미군정이 사면해준다면 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SCIRI는 미군 공격을 비판하고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2003년 8월 29일 나자프 폭발에서 모하메드 바크르 알 하킴이 암살된 후 압드 알 아지즈 알 하킴(Abd al-Aziz al-Hakim)이 지도권과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직을 승계했다.

(3) 이라크 이슬람당(IIP, Iraqi Islamic Party)

주요 수니파 이슬람 정당으로 무스림 형제당의 지부로 1960년 설립했다. 당시 카짐정권은 종교정당만 허용했다. 카짐정권의 입법을 비판하며 비밀스럽게 활동했다. 1991년 걸프전후 IIP 지도자들은 모여 이 정당을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했지만, 반정부단체들을 조정하는 데 역할을 행사하여 2003년 바트당 몰락 후 중요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과도통치위원회에 참가하고 무신 압드 알라미드가 순환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4) 이라크민족운동(INM, Iraqi National Movement)

2001년에 설립된 수니파 주도의 조직으로 INC로부터 분열

(5) 사드르 2세운동(the Sadr II Movement, Jamaat al-Sadr al-Thani)

바트정권 붕괴 이후 바그다드에서 2003년 4월 창립되었다. 이라크 대도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나자프의 이맘 알리 사원 통제) 모하메드 사디크 알사드의 아들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 (Mujtada al-Sadr)가 이 조직을 지도하고 있다. 사드르는 미군 주둔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과도통치위원회를 반역으로 규정하며 메디군(軍)을 창설해 수천명 규모의 무장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10월 10일 이슬람 정부의 예비내각을 발표했다. 일부 시아파 신도를 비롯해 젊은 층과 빈민이 지지하고 있다.

3) 전국 장교 그룹 (National Officer's Groups)

군인장교출신이 조직한 전국그룹으로 자유장교운동, 민족구원고위평의회, 이라크민족운동, 이라크민족연맹, 이라크장교운동 등이 있다.

4) 쿠르드 그룹

(1) 쿠르드민주당(KDP)

북부 이라크에 있는 주요 쿠르드 정당으로 현재 마슈드 바르자니가 지도하고 있다.

1945년 12월 테헤란에서 몰라 무스타파 바르자니가 창당하였다. 1931년 마흐마드 바르자니가 주도한 이라크로부터 쿠르드 독립을 위한 반란을 계승하고 있다. 이라크 전쿠르드지역에서 지지를 얻었지만 주요 지원은 바르자니 바라두스티와 수르치 부족으로부터 왔다. 이라크 정부와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였다. 1970년 자치정부로서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북부이라크 지역에 행정을 담당했다. 그러나 1974년 쿠르드 지역에 반란이 다시 발생했다.

1980-88 전쟁에서 이란과 동맹을 맺고 PUK에 호의적인 시리아와 관계는 약화되었다. 1987년 PUK와 유화정책을 펴고 1987년 이라크 쿠르드 전선(IKF)을 형성했지만 PUK가 PKK와 연대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KDP는 터키정부와 협정을 맺어 터키정부가 이라크내 PUK/PKK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에 KDP가 터키영토 통과를 얻어냈다.

걸프전에서 중립성을 유지. 이라크쿠르드전선이 걸프전후 북부이라크에서 봉기를 이끌었지만 이라크정부와 휴전협정을 맺었다. INC 성립에 참여하고 주요한 활동을 하였다. 1993년 8월 3개 쿠르드 소정당을 흡수. 1996년 8월 PUK에게 빼앗긴 이르빌 지역을 다시 찾고 쿠르드 지역에 있는 INC/미국 시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라크 군을 요청했다. 1998년 PUK와 관계를 회복해 쿠르드 자치지역의 공동운영관련 협정을 체결하였다. KDP가 키르쿠크에 대한 주장을 하지 말것을 터키가 요구해서 2002년 2월 이후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다. 터키는 이것이 쿠르드 민족주의 강화에 기여할 것을 우려하였다. 2002년 7월 1일 헌법초안을 작성했는데 1개의 아랍지역과 1개의 쿠르드 지역으로 구성되는 이라크연방공화국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란과 관계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9월 SCIRI와 군사문제와 정치문제 조정에 합의하였다.

마슈드 바르자니는 과도통치위원회에 합류하고 호쉬아드 지바리가 임시외무장관에 취임했다.

(2) 쿠르드 애국연맹(PUK)

1975년 3월 바르자니 부족에 대항하는 레닌주의를 지향하는 반정부그룹으로 형성되었다.

자랄 탈라바니가 지도, 시리아 정부와 긴밀한 연대(훈련과 무기 지원), 이란과 연대 회피, 리비아 중계자 역할을 했었다. 1983년 이란-이라크 전쟁시기에 이라크 지역인 하지 읍탄에서 이란 정부와 KDP가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라크 정부와 자치에 대해 공개토론을 시작하였다. 1985년 1월에 이라크 정부와 협상은 자치 지역에 대한 논쟁으로 중단되고 PUK는 바트정권에 대항하는 대규모 반란을 시작하면서 이란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1986년 이란과 협력조약을 맺고 바트정권 붕괴까지 공동투쟁할 것을 서약하였다. 이런 조치에 따라 PUK를 이란의 정부로 지칭하게 되었다.

이후 이란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터키 지원을 추구했다.

탈라바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2002년 8월 이라크 해방을 위해 PUK 군대가 미국과 협력할 것을 주장했다. PUK는 PKK와 같은 갈등상태이다. 동북부 이라크에서 미국과 터키 기업과 함께 2003년 5월부터 3개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3) 쿠르드 이슬람 연맹 (Kurdistan Islamic Union)

무슬림 형제당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책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지만 실제로 여러 아랍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쿠르드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데 노력하고 학생의 활동이 활발하다. 비폭력을 주창하고 이슬람쿠르드연합(Islam Kurdish League)을 지지한다.

(4) 안사르 알 이슬람(Ansar al-Islam, Supporters of Islam)

쿠르드가 통제하는 이라크 북부지역에 근거지를 둔 수니이슬람 그룹의 하나이다. 근거지는 이란과 접경지역인 비야라와 타웨라 계곡에 있다. 2001년 이슬람군인(Jund al-Islam)이란 이름으로 조직되고 사

담 후세인 정권을 지원하는 급진적인 쿠르드 이슬람 그룹으로 이 조직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와 연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장 급진적인 조직이라는 평가가 있다. 쿠르드애국연맹(PUK)과 전쟁상태이다. 2001년 쿠르드민주당(KDP)의 고위간부 암살에 책임이 있고 쿠르드민주당이 지도하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정부의 수반 부르한 살리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991년 10월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이라크 정부가 철수하자 쿠르드군이 이 지역을 통제한 후 다양한 반정부조직이 활동했다. 이라크 쿠르드지역에서 1987년에 세워진 쿠르드이슬람운동(Islam Movement in Kurdistan)이 이슬람 정치세력을 대표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쿠르드이슬람운동은 KDP와 PUK의 뒤를 잇는 제3의 정치군사세력이었다. 1992년 쿠르드의회선거에서 패배한 후 쿠르드공동정부에 협조하기 보다 IMK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 행정, 정치, 경제 시설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지역들은 PUK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워 PUK와 무장투쟁을 하였다.

IMK가 쿠르드자치정부와 협력을 하자 3분과로 분열되고 2001.9이 분과들은 다시결합하여 Jund al-Islam으로 통합된다. 이 그룹은 "이슬람의 진실한 길"을 주장하며 이 길에서 이탈한 세속적인 다른 정당에 대해 성전을 선포했다. 이 그룹이 이후 안사르 알 이슬람으로 변화했다.

http://www.iraqinews.com/org_ansar_al-islam.shtml

<http://www.hrw.org/backgrounder/mena/ansarbk020503.htm>

<참조> 쿠르드자유민주회의(KADEK, Kurdish Freedom and Democracy Congress)

KADEK는 '세계 최대의 소수민족'으로 불리는 인구 2천5백만명의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을 이끌어온 쿠르드 최대규모의 무장독립운동 단체로,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터키, 이란과 옛 소련지역에 걸친

쿠르디스탄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해 오랜 투쟁을 벌여왔다.

KADEK는 지난 80년대초부터 쿠르드 분리독립 무장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온 쿠르드노동자당(Kurdish Worker's Party, Partiya Karkeren Kurdistan or PKK)의 후신이다.

쿠르드노동자당은 1974년 동남부 터키에 거주하는 쿠르드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독립적인 쿠르드국가를 추구했다. PKK는 1960년대 터여키의 좌파 학생그룹이 발전한 것으로 이 조직의 지도자였던 압둘라 오잘란은 광범위한 좌파혁명보다 쿠르드의 해방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1978년 PKK는 디야르바키르 지역에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독립적인 쿠르드 국가를 추구했다. 이 조직은 경제적, 인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도와 마약 거래와 관련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1970년대 말 지하활동을 하고 1984년 쿠르드민족해방전선을 조직하였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오잘란은 비마르크스주의자와 종교적인 쿠르드인의 견해를 고려하여 광범위한 연합체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쿠르드인민해방군을 조직하고 쿠르드국가 수립을 추구해 터키 보안대와 민병대와 대립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유럽에 있는 터키 외교관과 기업인, 터키관광산업 등을 공격했다. 1990년대 후반이후 PKK는 군사적인 수단보다 정치적인 수단을 중시해 2002년 4월 조직이름을 쿠르드자유민주회의(KADEK)로 개칭하였다.

KADEK는 산간지역을 이용한 게릴라전에 능수능란하며 지난 10여년간 터키군과의 싸움에서 3만명 이상의 엄청난 전사자를 냈다. KADEK은 지난 99년 전설적인 게릴라 지도자 압둘라 오잘란이 체포된 뒤 터키 정부와 휴전협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터키 정부가 약속과는 달리 구금중인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사면-감형해주지 않고 반군의 무항을 강요하자, 2003년 9월 1일 다시 게릴라전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휴전 조치를 4년만에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이라크 북부 등의 정세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http://www.cdi.org/terrorism/pkk-pr.cfm>

프레이션, 2003-10-09 오전 11:43:25

<참조> 찰라비는 누구인가? 그의 지도력과 도덕성

이라크 반체제 진영은 이라크국민회의(INC), 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D) 등 거창해 보이는 반후세인 조직들을 비롯해 70여개에 이른다.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아온, 아랍에서 가장 큰 경멸을 받아온 차기 수반 후보는 아흐메드 찰라비(59)다. 이라크 시아파 무슬림이자 이라크국민회의 의장인 그는 4월6일 미 군용기편으로 이라크 남부에 도착해 대국민 연설에 나서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수학한 그는 틱체니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강력한 후원자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이라크를 떠나 이라크에서 생활한 시간은 거의 없다는 것. 이라크국민회의를 자신의 세력 강화에만 이용하는 점, 지나친 친미 성향을 보이는 점 등 때문에 같은 시아파의 주요 지도자들마저 그를 비판하고 있다. 찰라비의 부패행각도 문제다. 그는 요르단의 페트라 은행 총재로 재임할 때 예금 유용과 사기 등 혐의로 22년 징역형을 받았다. 급히 해외로 도피하여 수의를 입지는 않았으나 페트라 은행의 도산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요르단인들은 자살을 선택했다. 미 국무부는 그가 반체제 운동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겨레21 2003-04-16 04:55:00, 가디언 2003-04-01

4. 미군정과 이라크민중

1) 각 종파 종족과 미군정

(1) 시아파와 미군정: 초기의 협조 지금은 갈등

이라크인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아온 시아파는 전후 이라크를 이끄는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후 미 당국의 전후처리 노력에 수니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시아파 안에서도 온건파들은 비폭력 저항운동을 선호하지만 반체제 지도자 무하마드 바케르 알하킴 세력 등 반군병력을 보유한 일부 조직은 이란식 이슬람공화국 수립을 표방하며 무력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시아파 성직자들은 이라크의 장래와 관련, 후세인의 세속적 정권과는 대조적으로 이슬람 국가종교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들은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 행정공백을 메우며 전후 복구활동을 도맡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시아파들이 행정기구를 장악해 미군과 대립하고 있으며 바그다드에서도 반미시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미군이 게릴라 색출 노력을 강화하면서 10월 8일 이슬람 사원에 난입, 시아파 지도자를 연행한 사건으로 미국과 시아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다. 10월 9일 바그다드 시내 시아파 거주지역인 알 사드르 시티 경찰서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10일에는 양측간 충돌로 시아파 신도 및 미군 4명이 숨졌다. 강경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는 10월 10일 미국이 일명인 이라크 과도통치위를 부정하고 이슬람정부 수립을 선포, 미국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섰다. 11일 카르발라로 모인 시아파 신도들도 상당수가 미 점령당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한국일보 2003-04-21 18:49:50, 경향신문 2003-10-12 18:38:00

(2) 수니파와 미군정: 권 후세인, 저항 극심

- 그동안 미군에 대한 게릴라식 공격은 후세인을 추종하는 수니파가

주도해왔다. 하루 평균 12건의 매복공격과 테러가 발생해 미군 1명 정도가 숨지는데 이라크 중부 바그다드 북서쪽의 '이슬람교 수니파 3각지대'-바그다드, 티크리트, 라마디, 다우르 등 미군 관할의 중부 및 중북부 지역에서 가장 심하다.

- 중북부 지역이 게릴라의 온상이 된 것은 사담 후세인이 속한 이슬람 수니파의 밀집 거주 지역이어서 후세인을 추종하는 바프당원 및 비밀 경찰들이 저항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쉽기 때문이다.

- 미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게릴라 공격이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 이라크 저항세력의 송유관 파괴도 계속되고 있다. 9월18일 이라크 북쪽 바이지와 터키를 잇는 송유관이 폭탄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여 원유 수송이 중단됐다. 미군은 이번이 8월 중순 이후 3번째 송유관 공격이며, 하루 700만 달러(84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사담 후세인과 빈 라덴이 대미 항전의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2003-09-17 17:40 의

(3) 쿠르드족과 미군정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은 후세인 재임기간에 누구보다 혹독한 탄압을 겪었다. 오스만투르크의 침략 이후 주변 4개국에 의해 분단된 채 고난을 겪어 왔다. 주요쿠르드정치그룹이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두려워 하며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에 결합했다. 터키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고 연방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독립을 원하는 분파도 있다.

2003.8.7 요르단 대사관 폭발

8.19 바그다드 유엔본부 폭발

9.22 과도통치위원 아키라 알하시미 저격

10.9 스페인 외교관 살해

10.14 터키대사관 폭발

2) 미국 점령정책에 대한 이라크인의 태도

- * 이라크인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Hostility toward America has reached shocking levels," the panel stated in its report, which will be released Wednesday. "What is required is not merely tactical adaptation but strategic, and radical, transformation."

U.S. Must Counteract Image in Muslim World, Panel Says

NYT Oct.1, 2003

◆ 이라크민주정부 수립이 늦어지고 미군 주둔이 길어지면서 이라크 민중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이 지명한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와 과도내각이 형성되었지만 이라크인들은 이라크인들이 지배하는 정부 구성을 열망하고 있다.

◆인프라 복구=바그다드에서 요르단 국경까지 이어지는 탄탄대로는 미군의 폭격으로 파이고 손상됐다. 방송통신시설은 미군의 집중 공습으로 손대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다. 걸프전 때 파괴된 발전시설은 십수년째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주요 관공서들은 다 무너졌다. 급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제구호단체들은 이라크어린이들의 영양실정과 질병의 주원인을 급수 문제에서 찾고 있다.

◆ 인력부족 문제=오랜 급수조치와 전쟁 위기로 전문인력은 대부분 이라크를 빠져나가거나 전문기능을 포기해버렸다.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모자라고, 무너진 건물에서나마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집권 바트당은 식량배급은 물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했으나 바트당 조직이 붕괴된 지금은 기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 이라크 민간인 희생

이라크내부에 미군에 대한 저항이 치열해지면서 미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쟁 전후에 이라크의 민간인 사망자수가 급증, 최고 9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다수가 이라크 무장세력의 반격에 노이로제가 걸린 미-영군이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사격 등을 가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미-영군이 이라크국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0월 8일(현지시간)'이라크 희생자 조사(IBC)'라는 미국-영국의 합동 민간조사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폭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수는 사실상 전투가 끝난 4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2천8백46명으로 급증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중순 전만해도 하루 10명 정도였던 희생자 숫자가 전쟁이 끝난 뒤 8월까지 하루 28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폭력에 의한 희생자 가운데 총격에 의한 사망자는 전쟁 전에 10% 정도였으나, 현재는 60%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통계는 이라크 전역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IBC에 따르면, 이라크 전체에서 폭력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적게는 7천3백62명에서 많게는 9천1백64명에 이른다.

IBC는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정에 따르면 이라크점령군인 미, 영 연합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민간인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 침략 이후 민간인의 희생과 파괴를 늘렸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이러한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축출했으나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왜 아직도 미국이 이라크에 주둔하

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미군이 이라크 민간인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라크에서 미군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민간인 희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IBC는 "이제 이라크 점령군은 이라크에 관할권을 넘겨주고 국제사회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시켜주길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IBC는 "그렇지 않다면 이라크 주민들은 사람 후세인을 축출한 소위 '해방'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군정 하에서 테러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스안 2003-10-09 오전 11:19:16, 한국일보 2003-09-19 17:15:37

2003.8.7 요르단 대사관 폭발

8.19 바그다드 유엔본부 폭발

9.22 과도통치위원 아키라 알하시미 저격

10.9 스페인 외교관 살해

10.14 터키대사관 폭발

3) 미국 전후 정책에 대한 미국내 비판

▽행정부 내 혼선=이라크 전후 문제를 놓고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은 상호협력은커녕 혼선을 거듭했다. 백악관의 경우 국방부가 1년 전부터 200여명이 넘는 이라크인을 동원해 이라크 전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전쟁 전부터 조직해왔다는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전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의회와 질타를 받자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개의 실무그룹을 별도로 구성했다. 그러나 라이스 보좌관의 실무그룹은 이라크 재건 비용을 5000만~6000만달러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는 실책을 범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 또한 예비역 장성 제이 가너에게 이라크 전후 관리의 책임을 맡겨 국방부 이외의 라인에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말썽이 일자 폴 브레머 행정관을 이라크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라크 문제의 장기화에 따라 이라크에서 재건과정의 무계획을 비판 받으면서 부시행정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줄이고 백악관에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있다. 특히 이라크안정화그룹이 조직중에 있으며, 이 조직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관할할 예정이다. 이 조직은 반테러주위, 이라크에서 경제발전, 이라크 신경치구조의 형성, 행정부의 미디어 활동 등 4개의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담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발견 실패로 국민적 의구심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콘돌리자 라이스가 전후 이라크상황의 정책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는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갈등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이라크안정화그룹에 대해서 럽스펠드장관은 이 기구를 평화철하하고 있다.

▽평화없는 종전=브레머 행정관이 5월 종전 직후 이라크 군대를 해산해 수천명의 군인들을 무직자로 만들어 미국의 (잠정)적대세력이 되게 한 것도 실책으로 지적된다. 현지 정서에 밝은 사람들을 현지 치안유지 병력으로 대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라크 현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문화정서에 무지한 미군=이라크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미군들의 인행이 현지 반미감정을 부추겼다고 타임은 분석했다. 이라크 현지인은 "만일 현지경찰이 이라크 사람을 길가에 세우고 정중히 어떤 일이든 협조를 요청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군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이라크

사람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면 우리는 미국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미군들이 일부지역에서 사담 후세인 시절 군인들도 자제했던 이라크 민간인들의 집 수색을 감행한 것도 이들을 자극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전후 관리 무대책, 전문가 부족, 럽즈펠드의 편향적 인선=뉴스위크는 현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군정당국의 총인원 800명 중 아랍어 구사인력은 17명, 이라크 전문가는 1명뿐이라며 소홀한 전후 관리를 꼬집었다. 이런 전문가 부족 사태는 도널드 럽즈펠드 국방장관의 편향성에서 비롯됐다는 것. 국방부는 이라크 전문가 20명 중 16명을 바그다드 파견자로 선발했으나 럽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들이 아랍 입장에 호의적이라는 이유로 파견 인원을 대폭 줄였다. 물론 파월 국무장관은 럽즈펠드 장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이 따위로 일을 처리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으며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도 국방부 인사들을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 사느라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박쥐들’”로 혹평했다는 것이다.

타임과 뉴스위크 최신평(9월 29일자) 동아일보 2003-09-29 19:21:00

한겨레 10월 9일

▽ 예기치 않은 장기화 문제

부시대통령은 당초 “미군은 필요한 일정기간만 주둔할 것”이라고 단기주둔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이라크에는 지금 1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국방부 관리들과 현지 사령관들이 추가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주둔기간은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토미 프랭크스 전 중부군 사령관이 “이라크 점령보다 유지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 2003-07-09 11:55:5

▽ 재정 압박과 의회 반응

전쟁비용 자체는 480억달러 추정되었으나 국방성의 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한달에 40억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없다. 부시행정부는 870억달러의 전비를 의회에 신청했으며 미국 상하 양원은 논란 끝에 10월 17일 약 87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및아프가니스탄 전후 재건비용 지출안을 승인했다. 이 전비의 승인을 둘러싸고 미의회내에서 미국의 전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사회가 이라크재건비용을 공동부담할 것을 촉구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은 냉담하다.

7. 유연결의안 1511의 의미

(1) 이라크 전후 문제에 관해 가장 큰 쟁점은 전후 통치와 복구사업에 유엔의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는 점이다. 부시정부는 현재 15만명의 미군을 파병해 놓고도 연일 계속되는 반군의 테러로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적으로 심각한 고립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있었다. 10월 16일 유엔 이라크 결의안 반장일치로 통과하면서 미국은 이라크재건에 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일부 끌어냈다.

(2) 유연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11

▽ 이라크 주권회복 일정

유엔 결의안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라크 주권회복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라크인에게 먼저 주권을 이양하라”는 프-독-러 3국의 주장대신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라크 파도통치위원회는 안보리 및 미군정과 협의를 통해 안보리에 새 헌법 제정 일정 및 계획, 새 헌법 하에서의 총선 일정 등을 제시”하도록 한 미국측 안을 수용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그동안 이와 관련, “이라크에서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선 헌법이 제정되거나 총선이 치루어지기 전이라도 신속한 주권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미국 주도 다국적군문제

이 결의안은 이라크 치안 유지를 위한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구성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된 후 1년 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임무를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아 유엔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다국적군 지휘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주둔 기간은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는데로" 종료된다는 규정을 삽입, 군사적 점령 사태의 종식 조건을 밝히기는 했으나 미국은 종식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거부했다.였다.

▽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과도내각 인정

결의안은 또 미국이 임명한 과도통치위원회와 미국이 임명한 장관들은 과도기에 이라크 주권을 구현하는 임시정부의 주요 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통치 책임과 권한을 이라크인들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3) 10월 16일 결의안의 문제점

미국정부가 유엔결의안을 추구한 목적

유엔으로부터 도덕적 범률적 정당성과 승인을 받기위해서라기 보다 1) 파병을 꺼리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2) 이라크 재건을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더 얻기위해, 3) 유엔사무총장이 이라크에 유엔 민간요원을 다시 파견할 수 있기 위해, 4) 위 3가지를 통해 이라크인들이 전혀 점령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Ian Williams, Threading the Needle: UN Resolution 1511 and the Iraqi Occupation, October 16, 2003, Foreign Policy in Focus,

<http://www.fpif.org/commentary/2003/0310res1511.html>

-이 결의안은 미국주도의 전쟁과 점령군을 유엔이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엔헌장 Article 2(3)에 따라 "모든 구성국가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제분쟁을 해결", 유엔헌장 Article 2(4)에 따라 영토적 통합성과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주도의 참략과 이라크 점령이 선제/예방공격의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용인.

결의안이 통과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라크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그러나 "우리는 적이 공격을 하기 전에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해,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선제공격 독트린'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 새정부 선택권과 주권과 독립을 얻기 위하여 이라크인의 기본권과 자결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인의 동의도 없이 종전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과도통치위원회와 과도내각을 과도기에 이라크 주권을 구현하는 임시정부의 주요 기구로 합법화시켰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들이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하고 독립된 권리를 가지도록 주장한다. 어떠한 점령 세력도 이라크의 영토 보전을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제적인 지원 요구에 대한 어떠한 결정은 오로지 이라크 민중들에게 달려있다. 미국과 영

국의 이라크 점령은 불법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 권력이나 임시 정부가 점령군에 의해 수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령군이나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떠한 결정도 이라크의 민중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이라크 공격을 비판하지도 않고 유엔이 미국정책의 도구로서 증가하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유엔체계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독자적인 시민 사회 지원과 이라크 민중들과의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유엔 및 그 기관들과 기타 다른 정부들,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이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및 점령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이 점령군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지원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점령군에 의해, 그리고 점령군 하에서 설립된 모든 형태의 권력 또는 정부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국제 사회 및 전세계 정부들에 요청한다.

- 미국주도의 점령군은 이라크로부터 철수, 전쟁손실의 완전복구와 이라크 민중의 현재 필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한다.

참조: UNITING FOR PEACE COALITION OPPOSES US-PROPOSED RESOLUTION ON IRAQ PRESS RELEASE, October 15, 2003, www.uniting-for-peace.net

III. 이라크 점령에 대한 국제평화운동의 대응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03년 2월14일-16일 1000만명이 가까운 세계시민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국제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종전선언이후 세계시민사회는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자카르타평화회의와 관련 행동

2003년 5월19일에서 5월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국이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며 다양한 평화활동가들이 현 사태를 평가하고, 다음 계획을 수립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모였다. '아시아평화연대(Asian Peace Alliance)'와, '영국반전연합(Stop the War Coalition UK)',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 & Justice)', '이탈리아 사회포럼(Italian Social Forum)', '이스탄불 반전조정기구(Istanbul Not to War Coordination)', '폭탄 대신 책을(Books not Bombs)'의 대표자들, 이라크의 민주주의 활동가들, 인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의 조직가들, 세계여성대행진(World March of Women)에서 파견된 대표단, 인도네시아의 직종별 노동조합, 남아프리카 공화국 반민영화 포럼(South Africa Anti-privatization forum), 그린피스(Greenpeace), Focus on the Global South, 그리고 Jubilee South의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3일 동안의 열띤 논쟁과 토론 끝에, 참가자들은 자카르타 평화합의(Jakarta Peace Consensus)를 작성했다. 이 합의는 이라크전쟁 전후로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견해를 모아 정리한 것이며 이후 시민사회의 활동에 주요한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모든 외국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이라크가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본 회의는 미 정령군에 의해 이라크에 세워질 어떠한 정권에 대하여 승인을 보류해둘 것을

모든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1. 이라크 진상조사단 조직

우리는 바그다드에서의 전쟁 및 점령에 관한 회의 개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이라크 민주 단체들과의 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일련의 이라크 진상조사 파견단을 조직하기로 한다.

=> 이라크반전평화팀

1-2.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감시

이것의 목적은 전쟁 중에 가능한 범죄들과 기타 인권 및 민주주의 권리들에 관한 위반을 조사하여 문서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미국이 임명해놓은 어떤 정부와 군사 점령에 관한 감시 및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또한 이라크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전쟁을 통한 부당 이득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평화단체와 경제정의단체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바그다드에 국제점령감시 센터 (International Occupation Watch Center)를 설립해 이라크에서 미군당국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활동 목적은 국제적인 기업의 활동을 포함하고 석유를 포함한 자원에 대한 이라크인의 권리를 주창하며, 미점령하에서 경제정책과 재건정책을 감시하며, 점령군이 이라크 재건을 위해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며, 이라크의 자치로 전환을 감시하며, 점령하 여성의 권리와 자유에서 변화를 조사하며 관련 정보를 배포하며 지역, 국제여성조직과 연대를 촉진하며, 이라크를 방문하는 사실조사팀과 국제사회 대표들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http://www.occupationwatch.org/article.php?list=type&type=4>

1-3. 이라크 정보 웹사이트를 개설

우리는 이라크의 단체 및 개인들과 세계 시민 사회, 특히 반전·반세계화·세계사회포럼 운동진영들간의 폭넓은 유대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을 띤 대규모 대표단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라크인들과 직접 관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또한 정보와 자료들을 통합하기 위한 기타 다른 방법들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이라크 정보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한다.

=> 국제점령감시 센터에서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http://www.occupationwatch.org/>)

1-4. 국제민간법정(international Peoples' Tribunal)를 설립

터키, 일본, 남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운동진영에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라크 전쟁 및 점령 가해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국제민간법정(international Peoples' Tribunal)를 설립하기로 하며, 국제적인 검찰관 및 재판관들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 설립되어질 것이다.

=> 아시아평화연대 일본지부와 바우넷-지팬(VAWW-NET Japan)은 국제민간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터키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법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단체들은 이라크 재판의 정통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 두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재판이 단순히 정치적 캠페인에 멈추지 말고 대안적인 법률 프로젝트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을 쇠신하고 국제법의 정치적 효과와 함축이 재판에서 분명히 제시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라크전쟁의 젠더적 측면(gender aspects)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히로시마 평화단체와 나카사키 시민단체들은 이스탄불에서 열릴

국제인권법정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열화우라눔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대체를 조직하고 있다.

1-5. 전세계의 미국 군사 기지의 확산에 대한 전략적인 관심

아시아평화연대(the Asian Peace Alliance)에 의해 통합되어진 2004년 상반기에 그러한 기지 확산에 반대하는 세계 행동의 날을 위한 활동에 전념한다.

=>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 미국이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세계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미군기지 종식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5월에 열린 자카르타회의에서 지원을 받아 미군기지에 관한 국제적인 캠페인이 논의되어 한국에서 12월 미군기지 관련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2004년 세계사회포럼으로 연결되어 향후 미군기지 관련 공동대응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군기지 관련 이메일네트워크가 만들어져 미군기지, 미군주둔에 영향을 받는 지역조직·전국조직·국제조직, 연구자와 활동가 등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1-6. 세계평화연대 네트워크 창설 추구

모든 단계들과, 사회 운동진영, 그리고 우리의 활동 분석 및 계획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시기에, 특히 예비안 회의(서방8개국(G-8) 정상회담)와 칸쿤 회의(WTO 회의), 지역 사회포럼들, 그리고 봄베이에서의 다음번 세계사회포럼 기간 동안에 국제적인 '세계 평화 연대 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for Global Peace)'의 창설을 향한 공동 노력에 함께 결합해줄 것을 요청한다.

1-7. 이라크 점령 반대 및 미군 등 다국적군 이라크에서 철수
미국, 유럽, 아시아단체들이 9월 25일 이라크점령반대와 팔레스타인 점령 종단을 요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을 조직했다. 10월 25일 미국단체들과 한국, 일본, 터키 단체들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미군 철수 요구, 파병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IV. 국내 시민사회의 활동 및 과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라크 전부병 파병에 반대하여 2003년 9월 23일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출범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행동'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중연대, 민주노총,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전국농민회 총연맹,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평화불만드는여성회, 다함께 등을 포함하여 351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이후 이라크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으며, 특별히 지난 3월 한국정부의 이라크에 비전부병 파병 계획에 반대하는 파병반대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또한 평화활동가들이 '이라크반전평화팀'으로 이라크에 방문하여 전쟁반대, 이라크민중지원 등 활동을 해왔다.

1) 활동

(1) 9.27 국제공동행동

9월 27일 이스라엘의 점령과 억압, 학살에 맞서 팔레스타인 민중이 제2차 인티파다(항쟁)를 시작한 지 3주년 되는 날을 기념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 반전 공동 행동이 벌어졌고 한국에서도 국제행동이 조직되었다.

(2) 파병반대 다양한 집회 및 비상시국회의

(3) 한국군 파병 반대를 위한 국제서명 캠페인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국사회의 이라크 파병반대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미양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전투병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국제사회에의 호소문"을 작성해 해외 평화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에 돌려 351개 한국 단체, 6개 국제단체, 20개 외국단체, 146명 개인의 지지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에게 10월 16일 전달했다.

(4)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한-일-터키 공동행동

이라크파병반대 2차 국민행동의 날인 10월 25일, 전국 30여 개 주요 도시에서는 "파병철회와 규탄집회"가 이어졌으며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그리고 터키에서 "이라크 전쟁반대, 점령반대,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등지에서 약 1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8개 지역에서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이라크 전쟁 반대와 미군 철수"를 외쳤다. 특히 파병결정을 했다가 유엔결의 이후 철회로 돌아서고 있는 터키에서도 반전평화 단체들이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미국반전연합 단체인 ANSWER(Act Now to Stop the War and End Racism)은 이번 10월 25일 파병반대 행동의 날을 지지하는 연대메세지에서 "미군 병사들은 이라크전쟁이 거짓에 의해 치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꽃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폭탄의 환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길 원한다"며 "부시와 그의 추종자들이 요구하는 자금과 병사들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그 어떤 돈도 이들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을 규탄했다.

(5) 열화우라늄탄 피해자 지원 및 초청토론회

10월 13일 열화우라늄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조직되었고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세계우라늄무기회의가 함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열화우라늄무기는 1991년 걸프전에서 사용을 시작으로,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 아프카니스탄에서 사용되었으며, 2003년 이라크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기는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이라크에서 여성들이 기형아를 낳게 되면서 그 위험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평화권연대모임에서 International Action Center의 열화우라늄탄 전문가를 초청하여 11월 5일-8일까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6) 미군기지문제 국제회의

12월에 국내에서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7) 이라크반전평화팀

2) 과제

(1) 평화문화의 확산문제

이라크에서 폭력적인 절령과 이에 대응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보면서 폭력에 대해 점차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다. 절망한 이라크인들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강력한 저항으로서 비폭력적 저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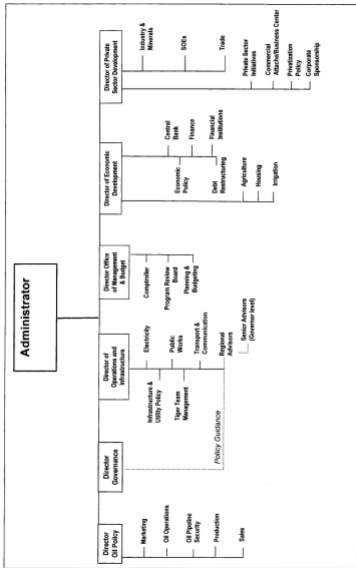
(2) 유엔안보리 1511 통과후 국민실득력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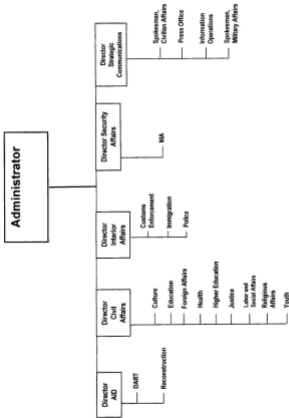
한미동맹관계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배신자라는 주장 (배신자론)

파병은 이라크 재건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경제이익론) 대응

유엔결의안 1511 대응

- (3) 국회 압박을 통한 파병동의안 부결운동
- (4) 전쟁의 피해자 지원과 평화교육
- (5) 이라크점령 감시센터 등과 국제연대
- (6) 국제민간법정 대응 문제, 여성단체는 바우넷 저편과 연대 고려





회원가입안내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을곳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통기		
관심분야	경제대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평화실성 <input type="checkbox"/> 소식지발행 <input type="checkbox"/> 스터디모임 <input type="checkbox"/> 평화축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200 년 월 일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02-2275-4860 전승 02-2275-4861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29508-1128009 (서울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